
중기사업계획('26 ~ '30)

2026. 1.

법 제 처

목 차

I. 그동안의 재정운용분석	1
1. 최근 5년간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1
2.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2
II. 향후 재정투자계획	16
1. 정책여건 현황 및 변동사항	16
2. 정책방향	20
3. 재정운용방향	21
4. 성과목표(지표)	33
III. 재정혁신 추진계획	34
1. 재정여건	34
2. 지출구조 혁신과제 추진계획	34
3. 기타 재정혁신과제 추진계획	35
IV. 중기 지출계획	36
1. 지출계획 총괄표	36
2. 지출변동 내역	37
3.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40
4. 국정과제 추진계획	42
V. 프로그램별 설명서	46

I. 그동안의 재정운용분석

1. 최근 5년간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 법제처는 세입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고, 세출예산으로만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약 0.01% 수준임.
- 분야, 부문별로는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으로 구성
- 전체 예산의 50.1%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49.9%가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 법제처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1%*로서 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인 1.7%**보다 높은 편임.

* 법제처 세출예산 규모 : ('22년) 431.9억원 → ('26년) 605.9억원

**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 : ('22년) 416.3조원 → ('26년) 444.4조원

※ 재정규모 증가 요인

- 법제처는 법제업무정보화추진, 법령정보제공, 법제정비 등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하고, 행정법제 혁신 등 중점 추진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재정규모가 증가해왔음.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비 투자규모 추이(백만원)
 - 법령정보제공 사업 : ('22) 2,177 → ('26) 1,436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22) 855 → ('26) 1,616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22) 1,049 → ('26) 1,474
 - 법령심사지원 사업 : ('22) 421 → ('26) 296
 - 법제정비 사업 : ('22) 1,521 → ('26) 1,145
 - 행정법제 혁신 사업 : ('22) 470 → ('26) 303
 -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 : ('22) 8,801 → ('26) 20,771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 ('22) 1,221 → ('26) 2,742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22) 277 → ('26) 430
 - 법제정책연구개발 : ('22) 74 → ('26) 50

< 법제처 지난 5년간의 재정운용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21실적	'22실적	'23실적	'24실적	'25실적	연평균 증가율
계	373	407	427	444	448	4.7
○ 예 산	373	407	427	444	448	4.7
【일반지방행정 분야】	373	407	427	444	448	4.7
▪ 일반행정 부문	373	407	427	444	448	4.7

2.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① 법제정보서비스 사업

<주요 성과>

○ 법령정보제공 사업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및 법제처의 주요 정책을 국민 체감형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입법 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 제공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25년 주요 법령 및 법제정책 홍보 콘텐츠(영상, 카드뉴스 등)를 제작하여 법제처 SNS에 게재(1,056건)하고, 입법예고 법령안 총 280건에 대한 온라인(9회), 지면광고(4회) 실시
-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및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법 이해도 제고 및 준법정신 함양
 - '25년도 어린이법제관 위촉 인원: 1,300명
 - '25년도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 활동 인원: 2,708명
 - '25년도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게시물 등록 건수: 월 평균 2,270건
 - '25년도 청소년법제관 위촉인원: 19개 중·고등학교 총 352명
 - '25년도 청소년법제관 입법체험 활동 참여인원: 2,111명
-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 자료와 함께 제공
 - '21년 4개 분야(조세·부동산·노동·안전)의 12개 법령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및 부처 감수를 거쳐 약 431개 콘텐츠를 시범 개발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서비스
 - '22년 시각 콘텐츠 개선 등 지속적인 관리와 상시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한눈보기' 서비스 관리시스템 개발 완료
 - '23년 4개 분야(부동산·국토·조세·노동)의 32개 법령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및 부처 감수를 거쳐 440개 콘텐츠 추가 개발
 - '24년 3개 분야(농림·축산·수산, 보건, 사회복지)의 40개 법령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및 부처 감수를 거쳐 484개 콘텐츠를 추가 개발
 - '25년 5개 분야(재정·경제, 교육·학술 등)의 81개 법령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및 부처 감수를 거쳐 533개 콘텐츠를 추가 개발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우리 국민·기업·정부의 대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보 서비스로서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운영, 세계 주요 국가·지역·기구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실시
 - '25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건수: 총 1,155건
 - '25년 번역 요약본 등 제공 건수: 총 839건
 - '25년 법제동향 제공 건수: 총 149건
- 국내 법령의 영문 번역에 대한 수요 조사 및 국내 법령 영문 번역계획 수립·시행, 국내 법령 번역 관계 기관 간 협의회 구성·운영, 국내 법령의 영문 번역본 감수 등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 수행
 - * '25년 영문 법령 번역 건수: 총 190건, 외국어 번역 협의회 총 2건
- 남북법제 연구를 통한 남북 관계 진전 대비 법제 역량 강화
 - 정책연구용역 추진, 연구위원회 운영 및 관학연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남북 관계 진전에 대비한 남북법제 정비 방안 연구
 - * '25년 남북법제 통합 방안 연구(1건), 남북법제 연구위원회(3회), 남북법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1회) 등 실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을 일상생활 주제별로 분류·해설하여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보편적 법령 접근성 보장 및 법의식 제고
 - (활용성↑) 어려운 법령제명·키워드를 몰라도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쉽게 해설·분류
 - * 서비스 개시 후 일일 방문 수 15.5배 증가, ('12) 12,134명 ⇒ ('25) 188,428명
 - (편의성↑) 모바일 위주의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제공 중인 “SMART 생활법률” 앱에 대한 긍정적 평가 지속
 - * 모바일앱 다운로드 건수(누적): ('22) 269천 → ('23) 282천 → ('24) 292천 → ('25) 304천
 - (법의식↑) 최신 판례·이슈를 웹툰으로 재구성하여 직접 평결에 참여할 수 있는 ‘솔로몬의 재판’ 등 참여형 콘텐츠 확대
 - * 솔로몬의 재판 평결(월 2회) 회당 평균 참여자 수 약 724명
 - (비용↓) 생활 속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법률문제를 Q&A로 제공하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별 궁금증 해소, 법률자문 비용 절감 효과
 - * 네이버 지식IN과 생활법령 백문백답 연계

-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국내 정착에 필요한 법령정보(건강보험, 영유아 교육 등)를 쉽게 해설하여 번역·제공하여 건전한 다문화사회 발전 기반 마련
- (소외·차별↓)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이주민이 법을 몰라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법령을 12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
- (사회통합↑) 외국인 및 이주민 정책 관련 현장 활동 전문가 의견수렴(외국어 생활법령 전문가 자문회의 연 1회 개최), 외국인 생활법령교육(연 16회) 등을 통해 국내 정책 및 법제도에 관한 이해도 제고
- 최신 법령정보를 카드뉴스, 웹툰, Q&A로 재구성하여 법령·정책 홍보
- (정책홍보↑) 노인복지, 금융소비자 보호 등 국민의 삶과 직접 연계된 법령을 쉽게 해설하여 제공, 사회안전·복지 등 주요 정책 홍보

<향후 과제>

○ 법령정보제공 사업

- 온라인 매체(블로그, SNS 등)를 통한 홍보에 집중하되, 정보의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매체(TV, 신문, 간행물 등)를 균형 있게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 법령 및 법제정책 홍보를 병행하고,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정책 현장 생중계를 확대 추진할 필요
- 어린이·청소년법제관에 대한 입법체험 활동 강화로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한눈보기’ 서비스 신규 콘텐츠 추가 개발 및 기존 콘텐츠 점검·개선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법령의 완역률을 높이고, 해외법령의 번역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수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법령정보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로 제공하고, 기존에 구축된 해외법령 DB의 원활한 공유·확산을 위한 고도화된 시스템 체계 마련 필요
-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해외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 대상 수요조사를 강화할 필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국민들의 생활변화와 관심에 맞춰 신규 생활법령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기존 콘텐츠의 지속적인 현행화 추진 필요
-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생활법령 콘텐츠를 신속히 현행화 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AI 기반 대화형 검색서비스 제공 필요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조례 콘텐츠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법령 접근성 개선

② 정부입법 총괄·관리 사업

<주요 성과>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심사지원
 - '25년 법률안 국회제출(106건) 지원, 법률 공포(674건) 등 정부의 원활한 법제업무수행을 지원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정비 및 해석 사례 등을 보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개편 발간
 - 체계적인 법제업무평가를 통한 중앙행정기관의 법제 역량 강화 지원
- 법령입법지원
 - 법체계상 수직적(헌법, 법률 및 하위법령), 수평적(개별 법령 간) 통일을 확보하면서 정부 정책이 법령의 형식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필요한 입법 기준 마련
 - * '13년 ~ '19년간 추가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책자 II ~ V 발간(약 170건 기준 검토), '18년 「법령심사 길잡이」, '21년 「법령 입안·심사 기준」 전면 개정 등으로 현재 전 부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으로 활용 중
 - 입법내용의 전문화, 다수부처 관련 융·복합 법령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쟁점 법령안의 증대 등으로 각 부처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전문적 법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하는 법령안의 입안과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입안지원 제도 운영
 - * '12년 ~ '25년간 총 3,154건에 대한 법령입안지원 실시

○ 법제정비 사업

- 법령정비

- (민생 안정과 공정·상생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부담 경감과 청년·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총 167건의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민생 안정과 공정·상생 사회 구현에 기여
- (다양한 법령개선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령개선의견을 수렴
 - * '25년 국민아이디어 공모제(4~5월), 현장간담회 총 3회 개최
- (미래 사회 대비)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2회), 사회 변화에 따른 법령 개선 과제 발굴 및 일괄정비(총 48건)를 통해 미래 사회 도래에 따른 법제 방향 모색 및 법제 환경 구축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 (자치법규 의견제시) 지방정부의 조례·규칙 입안·집행 시 상위법 위반 여부 및 조례 자체의 해석상 의문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11년~)
 - * '25년까지 총 4,326건 회신('25년 273건 회신)하였으며, 매년 의견제시 사례집을 발간하여 지방정부에 배포 중
- (자치법제상담 119) 법제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기술적 또는 비교적 간결한 자치입법 사안에 대하여 유선 등으로 신속하게 상담의견 제시('20년~)
 - * '25년까지 총 5,183건 상담 실시('25년 910회 상담),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자주 문의하는 자치입법 관련 질의 답변 내용을 책자(자치법규 Q&A)로 발간·배포('22.12.) 및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자치법제 지원 업무에 대한 안내를 위한 책자(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 발간·배포('26.1.)
- (지방정부 법제역량 제고 지원)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방안, 자치법제 관련 주요 쟁점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관련 교육 지속 추진
 - * ('25년)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 2회 개최(5.30., 8.29.) 등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조례 속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규정 등 숨은 규제 또는 규제완화 기여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지방분권 강화 기반 마련('23년~)

* '25년 83개 지방정부 조례 전수조사 및 정비과제 총 2,329건 발굴·통보

- (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관리)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제·개정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지방정부 등에 통보(공문)하여 법령 제·개정 현황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17년~)하고, 지방정부의 필수조례 입법현황을 점검·관리하기 위해 행안부 주관 지방정부 합동평가의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관리

* '25년 위임조례 제·개정 필요대상 236건 통보

- 알기 쉬운 법제구축

- (어려운 용어 사전 차단)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처협의안 검토 등 입법 단계별 사전 차단 실시

* ('22년) 어려운 용어 548개 발굴, 법령 심사 453개 완료(차단율 82.7%)

* ('23년) 어려운 용어 492개 발굴, 법령 심사 409개 완료(차단율 83.1%)

* ('24년) 어려운 용어 487개 발굴, 법령 심사 399개 완료(차단율 81.9%)

* ('25년) 어려운 용어 341개 발굴, 법령 심사 277개 완료(차단율 81.2%)

- (어려운 용어 사후 정비)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고,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거쳐 집중적으로 정비

* (법령 정비: '19년~'22년) 국토부 등 18개 부처 소관 어려운 법령용어 2,000여건 개정 협의 완료, 법률 663건 입법 추진, 법률 184건·대통령령 698건·총리령·부령 678건 개정 완료('24. 12. 기준)

* (행정규칙 정비: '20년~'24년) 교육부 등 15개 부처(1차)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1,992개에 대한 정비안 마련,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2차)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2,401개에 대한 정비안 마련,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3차)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2,059개에 대한 정비안 마련('24. 12. 기준)

- (어려운 법령문장 사후 정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집중적으로 정비

* (1차 정비: '23년~'24년) 복지부 등 6개 부처 소관 법령 속 어려운 문장 1,976개를 발굴하여 323개 정비안 마련('24. 12. 기준)

* (2차 정비: '24년~'25년) 공정위 등 10개 부처 소관 법령 속 어려운 문장 1,646개를 발굴하여 211개 정비안 마련('25. 12. 기준)

* (3차 정비: '25년~'26년) 교육부 등 4개 부처 소관 법령 속 어려운 문장 729개를 발굴하여 33개에 대하여 부처 협의 진행 중('25. 12. 기준)

-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문장 사후 정비) 현행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문장을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집중적으로 정비

- * ('24년~'25년) 공정위 등 11개 부처 소관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
· 문장 6,942개를 발굴하여 8개 부처 소관 표준약관·표준계약서에 대한 정비안 1,256개 마련('25. 12. 기준)

- (상시 알법 검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되는 법령안, 의원입법 법률 예비검토의견서 및 조례안을 검토하여 정비

* ('22년) 법령안 97건, 조례안 131건 정비

* ('23년) 법령안 65건, 조례안 121건 정비

* ('24년) 법령안 120건, 조례안 35건 정비

* ('25년) 법령안 74건, 조례안 30건, 의원입법 법률 예비검토의견서 59건 정비

○ 행정법제 혁신 사업

-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개선

-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 정비) 국회 적극 방문설명 등을 통하여 24개(129개 법률) 일괄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 (하위법령 정비) 국회 통과한 행정법제 혁신 법체계 정비 법률의 하위 법령(대통령령 16건, 시행규칙 7건) 일괄정비 완료로 법체계 정합성 확보
- (국민 권리구제 제도 내실화)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 및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서식(시행규칙 58건) 정비 완료(9. 19. 공포 등)
- (입법영향분석)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대상으로 집행실태와 효과성, 국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입법영향분석 실시
- *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제도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법제도 개선에 기여

■ 2025년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발굴 개선과제 ■

폐교재산 활용 제도	△ 수의계약 대상 폐교 활용 용도 확대 △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근거 마련 △ 행정절차 부담 절감 규정 마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대부 범위 정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 미술작품 인지율 등 고려한 설치 기준 개선 △ 미술작품 관련 위임 근거 마련 △ 다수 미술작품 설치 유인 방안 강구
청소년 보호 제도	△ 친권자등 범위 확대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현실화 △ 청소년 유해행위 범위 현실화 △ 법률 적용 대상 청소년 범위 실질화

- (「행정기본법」 개정) 과징금 채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 기간 상한 설정 등의 내용을 규정한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납부제도 합리화 추진

<향후 과제>

○ 법령심사지원 사업

- 정부입법절차 개선·발전을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법령심사 지원 필요
- 시급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법령입법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입법지원 제공 확대

○ 법제정비 사업

- 소상공인 등 경영부담 완화, 청년 및 사회적 약자의 공정한 기회 보장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 사항 지속 발굴·정비 추진
- 미래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법령정비 사항 지속 발굴·정비 추진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입안지원 요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및 지방정부의 법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강화 필요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계기로 그간의 정비 성과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능동적으로 도입하여, 문장 자동 생성 체계 구축 등 사업의 고도화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

○ 행정법제 혁신 사업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행정 수요와 학계·법조계·국민의 제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국가행정 법제의 지속적인 보완·발전 추진
- 신기술 확산, 규제 혁신,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多 부처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 현행 법령에 대한 입법 효과성·입법 영향을 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추진

③ 법제업무정보화지원 사업

<주요 성과>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

-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령을 통합 제공하고, 기능 개선을 통해 국민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 * 법령정보 제공량: 510만건('23년) → 620만건('24년) → 743만건('25년)
- 전자점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령·자치법규·판례 등 약 306만 건의 법령정보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등 약 8,000개의 별표·서식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강화
 - * 국가법령정보센터 PC 웹과 모바일 앱의 접근성 품질인증을 2년 연속 획득(8월)
- 검색창에 입력한 질문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범주를 나눈 후 법조문을 그림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정 법령과 관련된 상·하위 관계 또는 관련법령을 한 화면에 제공하는 등 지능형 법령검색 고도화('25.12.)
 - * 자주찾는 질문(FAQ) 830개를 구축하여 검색창에서 일부 키워드 입력만으로 자동완성 기능 제공
-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법령 조문, 입법 배경 및 취지,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정리·요약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4.11.)
- 노후화된 정부입법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통해 법제업무를 통합 운영 및 관리하고 지능화·자동화하여 법제업무의 효율적·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을 위한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4.1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관리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3.10.)
- 법령심사·해석·정비 등 법제 업무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5.9.)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31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일반·특별행정심판 재결례, 행정부 내 보유 판례 등의 정보를 AI 활용 및 데이터 친화적 형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25.11.)

<향후 과제>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 법령특화 AI 모델과 RAG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개통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모바일 앱 개발
 - * '26년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1차) 추진 예정

- 법제업무 수요 증가와 입법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AI·빅데이터 등 최신 신기술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법제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시스템의 전면 재구축하고, AI를 활용한 지능화·자동화 서비스 제공
 - * '26년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1차) 추진 예정
-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해설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AI 기반 대화형 검색서비스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제작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 '26년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1차) 추진 예정
- 법령심사·해석·정비 등 법제 업무 지원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조화·통합 관리하고, AI·빅데이터 기반 분석 기능을 갖춘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09년 구축 이후 서비스의 규모와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 검색 편의성 저하 및 최신 IT 기술 적용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26년 ISP 수립을 통해 AI 기반의 고도화된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면 개편 추진
 - * 세계법제정보센터 연간 이용자: ('21) 83만명 → ('22) 118만명 → ('23) 186만명 → ('24) 219만명 → ('25) 361만명
- 노후화된 처내 행정정보시스템 교체에 따른 응용프로그램(AP) 이관을 통해 안정적인 법제업무 서비스 지원과 증가하는 기관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 강화를 위한 컨설팅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노후 서버 교체 및 AP 이관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4 법제전문성향상 사업

<주요 성과>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 공무원의 법령입안·법령해석 등 법제업무 능력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법제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행정에 대한

대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구현 등 국정과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여

- 법령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민 법의식 성숙에 따라 공무원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요 증가, 법제교육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법제교육 실시를 위해 태안 법제교육원과 서울 법제교육센터 체제 구축
-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포용적 법제교육 실현
-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대상으로 국내정착 분야, 자녀양육 분야 등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안내하는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연 도	교육훈련 실적					
	과정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연간 교육일수	업무 활용도	만족도
2022년	67	717	41,193	921	91.4	92.9
2023년	66	692	39,044	1,059	91.9	93.0
2024년	81	667	39,568	917	92.0	93.4
2025년	84	604	41,566	933	92.1	93.5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기관 간 교류)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등 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법제행정 및 법령정보관리 등에 대한 지식·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에 친(親)한국적 법제 환경 마련
- 다양한 국가들과 법제교류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 관계를 기반으로 ODA를 통한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 전파(네팔, 인도네시아 등) 등에 기여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사회의 디지털 경제법제 현황 및 법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국제포럼 개최(‘25.11.) 및 9개국의 민·관·학 전문가 초청
- 분상원장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분야에 대한 아시아 주요 국가(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쟁점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건설적 논의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대한민국 · 몽골 · 태국 · 우즈베키스탄 4개 국가의 법제기관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를 공식 설립(’25.11.)
- 기후변화, 인공지능발전 등 아시아 지역 내의 공동 현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 · 대응할 뿐만 아니라, 법제정책 · 법령정보 등 분야의 상시 · 지속적으로 교류 · 협력할 기반 마련

<향후 과제>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 헌법과 행정실무를 연계한 신규 과정 등 공무원 대상 헌법 강의 확대, 사례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헌법 교육 콘텐츠 개발 · 제공
- 중앙 및 지방교육기관과 함께 협업하여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신규 개발하여 운영

○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

- (기관 간 교류)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생발전을 지속 도모하는 한편, 미주 · 유럽 국가 등과의 교류를 통해 우수 법제를 적극 참고할 필요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법제 분야의 아시아 대표 국제회의로서 시대적 법제 쟁점에 대한 학술 논의의 장으로 지속 추진할 필요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협의체의 상시 · 지속적 교류를 통해 법제적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협의체의 규모 · 위상을 단계적 제고할 필요

< 법제처 현 정부 재정부용에 대한 성과평가 요약표 >

구 분	주요 성과	향후 과제
【일반행정지방분야】 ▪ 일반행정부문 정부입법총괄지원	▪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 및 법제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 게재 증가* * (’24) 905건 → (’25) 1,056건	▪ 온라인 홍보에 집중하되, 법령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병행하고,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정책 현장 생중계 확대 추진

▪ '25년 '한눈보기' 서비스 5개 분야 81개 법령에 대한 533개 콘텐츠 추가 개발 ▪ 우리 국민·기업의 대외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구축한 세계법제정보센터 이용 활성화 * ('23) 1,832천명→('24) 2,185천명→('25) 3,607천명 ▪ 국민이 필요한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방문자 수 지속 증가* * ('23) 113천명 → ('24) 119천명 → ('25) 188천명 ▪ 민생 안정과 공정·상생을 위한 법령정비 96건(법률 14건, 대통령령 68건, 부령·총리령 14건) 완료 ▪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2회), 사회 변화에 따른 법령 개선 과제 발굴 및 일괄정비(총 48건)를 통해 미래 사회 도래에 따른 법제 방향 모색 및 법제 환경 구축 ▪ 어려운 용어 사전 차단 및 어려운 법령문장 사후 정비 * (용어 사전차단) 341개 발굴, 법령 심사 277개 완료 * (문장 사후정비) 729개 발굴, 33개에 대하여 부처 협의 진행 중 ▪ 행정법제 혁신 법체계 정비안 24개(129개 법률) 일괄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 및 이의신청 활성화를 위한 서식(시행규칙 58건) 정비 완료(9. 19. 공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판례·행정규칙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 '한눈보기' 서비스 신규 콘텐츠 추가 개발 및 기존 콘텐츠 점검·개선 ▪ 해외법령 원문 및 제공량을 늘리고 세계법제정보센터 개편 등 시스템 고도화 필요 ▪ 신속·정확한 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생활법령·조례 콘텐츠의 현행화 주기 단축 필요 ▪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검색서비스 개선 필요 ▪ 민생 안정과 공정·상생을 위한 법령정비 사항 지속 발굴·정비 추진 ▪ 미래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법령정비 사항 지속 발굴·정비 추진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계기로 그간의 정비 성과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능동적으로 도입하여, 문장 자동 생성 체계 구축 등 사업의 고도화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 ▪ 미래 행정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국가행정법제의 보완·발전 추진 ▪ 행정법체계 공통제도 및 주요 법령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법조문,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
---	---

필요한 법령정보를 통합 제공 * ('23) 510만건 → ('24) 620만건 → ('25) 743만건 ▪ '25년 84개 법제교육과정을 운영, 41,566명 교육 실시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설립 및 교류·협력을 통해 아 시아 지역 내 법제협력 기반 마 련	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검색으로 전환 ▪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법제교육원 및 법제교육센터 이원화 체제의 안정화 ▪ 공직자를 비롯한 민주시민 양성 을 위한 헌법 교육 강화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의 위상 및 역할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일본·EU국가 등 선진국 과의 교류를 통해 우수 법제 논 의
--	--

II. 향후 재정투자계획

1. 정책여건 현황 및 변동사항

○ 법령정보제공 사업

-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과급력 있는 홍보에 집중하되,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균형 있는 홍보를 병행하고,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정책 현장 생중계 확대 추진 필요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참여자가 증가하고 운영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임금상승률 대비 낮은 용역비용으로 양질의 입법체험 활동 제공에 어려움 발생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은 여전히 법령을 어렵게 느끼고 있음
 -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제공하여 국민의 법령 활용도 제고 필요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 분야별 해외 법령정보 제공 확대 필요
- 급증하는 해외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시의적절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품질 관리 필요
- 기존 남북법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심화연구 필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법령 수 급증) 미확인·불확실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과잉 시대’에서 정확하고 검증된 법령정보를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전달 필요
 - 단순 나열식의 법령정보 제공이 아닌 국민의 수요를 고려한 카드뉴스, Q&A 및 참여형 콘텐츠의 확대로 타 서비스와 차별성 강화 필요
 - 지방시대 전환에 따른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증가로,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정보에 대한 신속·정확한 법령정보 제공 필요
- (국민참여 증가) 국민 권리의식 신장, 민원업무의 직접 수행 증가에 따라 허가·신고 등 민원 및 정책 참여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한 수요 증가

-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의 조기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법령 정보 수요 급증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심사지원
 -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각종 입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 법령 등 정부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입법 수요가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입법 지원 필요성 증가
 - 정부입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입법 총괄기관으로서 부처별 법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점검할 필요성 증가
 -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적극행정 법제가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의 내용 및 기준을 확산시킬 필요성 증가
- 법령입법지원
 - 법령체계 간 통일을 확보하면서 인공지능 발전 등 빠르게 변화하는 법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입법화할 필요성 증대
 - 국정과제, 규제 혁신 등 주요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입안 과정의 효율화'에 대한 법령 소관 부처의 수요가 급증
 - 빠르게 발전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해외 입법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입법사례 등을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 지원 필요성 증대

○ 법제정비 사업

- 법령정비 사업
 - 사업형태의 디지털 전환, 1인 사업자 증가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활발한 사업 진출과 운영을 지원하고, 청년 및 사회적 약자의 공정한 기회 보장 및 경제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 제고 필요
 -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 확대 필요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르는 법령정비 사항에 대한 선행 연구·조사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법제환경 개선 수요에 대비 필요
 -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행정규칙은 법령상 규제의 실질적인 작동 기제로,

위법·불합리한 규제가 포함된 행정규칙의 사전차단 필요하며,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치밀한 이행을 위해 행정규칙 발령 후 사후 심사 체계의 한계 극복 필요

- 정책 집행의 최종단계 규범으로서 국민생활에 직접 맞닿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은 그 입안 및 발령이 부처 자율에 맡겨져 적법성 담보에 한계가 있어, 발령 후 운영 중인 행정규칙의 합리성·적법성 제고를 위한 심사 및 발령·운영·내부통제 방식 등 전반적인 행정규칙 제도 개선 연구 필요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사업

- 지방분권 확대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치법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

* 연도별 자치법규 보유현황: ('10년) 76,020건 → ('25년) 174,357건

-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한 국민 요구 및 정부 의지 증대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법령정비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형 법령정비 필요성 확대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

-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여전히 법령을 여전히 어렵게 느끼고 있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적절한 문장 생성·제공 가능성 증대

○ 행정법제 혁신 사업

- 국민이 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공무원도 명확한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행정법 체계 개선 지속 추진 필요
- 기존 법제도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제도가 지속 등장함에 따라 규제 혁신 및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입법 영향분석을 통해 행정법령의 품질 관리 필요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

- AI 강국 실현과 함께 국민들이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AI에 기반한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마련
-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사업은 국정과제(24-1) '세계 1위 AI 정부 실현'의 30대 핵심과제에 포함되어 추진 중

- 법령정보 제공 수 및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 서버 장비를 선제적으로 교체하여 중단 없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체계의 확립 필요
 - * 1등급 시스템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후 서버 장비('17년 도입된 28식) 교체 필요
- 법령심사·해석·정비 등 법제 업무를 데이터 기반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 데이터를 체계적 수집·관리, AI 활용 가능한 데이터셋 구축, AI·빅데이터 기반 분석 기능의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필요
 - * 정부입법시스템 등 처내 정보시스템은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 등을 연계·활용하여 법제업무 수행에 활용
- 법제업무 수요 증가와 입법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하고 최신 신기술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법제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AI를 활용한 지능화·자동화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 중심의 법제업무 통합관리 체계 구현
-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해설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개선 및 콘텐츠 제작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지원 체계 마련 필요
 - * 방문자 수 및 콘텐츠 수의 급격한 증가,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행화 필요성 증대
- K-산업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 법령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바,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최신 해외 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민·기업의 대외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
 - * 세계법제정보센터 연간 방문자 수: ('22) 144만→('23) 183만→('24) 219만→('25) 361만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 태안 법제교육원 및 서울 법제교육센터에서의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 콘텐츠 보완 및 신규 개발, 태안 법제교육원과 서울 법제교육원의 차별화 전략 필요
- 중앙·지방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제교육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지방 교육기관의 기관별 수요에 따른 기관연계 교육과정 설계 요청 증가
- 헌법과 행정실무를 연계한 신규 과정 등 공무원 대상 헌법 강의 확대 등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헌법 가치 확산을 위한 헌법 교육 강화 필요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기술 및 사회 변화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율·지원하는 법제를 선진국과의 교류 및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적절히 구축할 필요성 증가
- EU(유럽연합),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등 세계의 블록화 현상에 대응하여 아시아 지역 내 법제 교류·협력을 지속 강화할 필요

2. 정책방향

□ 신속한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법제 지원

- 국정입법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법제 지원을 실시하며, 정부의 의원입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원입법 종합 관리체계 구축
- 국정과제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의 선제적 발굴 및 입안·심사 일원화를 통해 맞춤형 입안 지원 제공
- 현안과 관련된 법적 쟁점의 신속한 해석·자문 제공을 통해 국정 현안 해결을 뒷받침

□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법령의 전수조사 및 정비를 통해 국민의 불편 해소 및 법령 체계의 정합성 제고
- 규제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규제 개선 수요 발생 시 국가적 차원에서 개별 법령에 산재한 유사과제를 모두 발굴·정비하는 협업정비 실시
- 소상공인·청년 등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정비과제 발굴 및 일괄정비 추진
- 지방정부의 현장 법령정비 수요를 직접 듣고 검토하는 법령정비 제안 창구를 신설하여 지방정부 및 소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법령정비 지원

□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 AI 기반의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상적인 문장으로 법령, 판례, 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정보 접근성 제고

- K-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AI를 활용한 최신 해외법령정보 수집, 번역본 수 대폭 확대 및 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전면 개선 추진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참여국 확대와 유럽·미국 등 다양한 국가와의 수시 교류를 통한 글로벌 법제 협력 강화

□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 헌법가치에 기반한 법제 심사를 위하여 심사 기준에 헌법 원칙을 반영하는 등 법제 업무 전 과정에 헌법 기반 확립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헌법 및 민주주의 가치 교육을 제공하여 헌법 교육의 접근성 제고 및 국민주권 가치 실현

3. 재정운용방향

- ◇ 정부입법 관리 강화 및 법제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 창출 기여
- ◇ 대국민 법령정보 제공 및 법제업무 지원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전환하여 법령정보 접근성과 법제업무 효율성 제고
- ◇ 성과·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외부의 사업 개선 지적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자의 내실화 및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편성·운용의 효과성 강화

○ 법령정보제공 사업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국민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광고로 확대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전통매체 홍보를 병행하여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참가 기관, 입법체험활동 실시 현황 및 용역비용 단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사업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 도모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시각 콘텐츠 및 일상용어로 풀이하는 해설 콘텐츠로 개발·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편하게 보고 이해하기 쉬운 '좋은 법' 체계를 마련

* '26년 예산 1,436백만원 → '27년 요구 1,563백만원(증 127백만원, +8.8%)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이용자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해외법령의 한글 번역본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 법령 번역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중기부, 산업부 등)과의 협업 및 기업 수요 조사 확대를 통해 서비스를 확산하고, 해외 진출 관련 사이트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외 법령정보 제공 확산 추진
- 주요국의 해외 법령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국가별 법령 체계도 제작·지원
- 각 기관별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중복 번역 방지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효율적 법령 번역 추진
- 외국어로 번역된 국내 법령이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 따라 번역되었는지에 대한 감수를 통해 번역 품질 관리
- 향후 남북 관계 진전 시 실질적인 교류·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법제 정비 방안 연구
-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해 공동학술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법제 유관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소통·협업

* '26년 예산 1,616백만원 → '27년 요구 2,857백만원(증 1,241백만원, +76.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국문 콘텐츠) AI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대응 및 보편적 복지 제공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를 선제적으로 개발·제공
 - 법령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종전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전수 검토하여 개정조문, 판례 반영 등 콘텐츠 품질관리 강화
 - 서비스 이용자의 관심분야 및 개선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실시
 - 각 지방정부별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해설·가공하고 법령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법령부터 조례에 이르기까지 완결성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
- (외국어 콘텐츠)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및 법률분쟁 관련 번역 법령정보

개발을 통하여 외국인의 조기 적응에 필요한 법령정보의 직접적 지원

- 외국인 및 이주민의 국내생활 안정과 적응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취업,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 영유아 교육 등 관련 법령정보 번역·제공
- 어려운 법령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와 그림을 활용한 카드뉴스 등 시각화 콘텐츠 개발 확대
- 외국어 법령정보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번역 품질 검수 강화
- (홍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정보취약 계층·청소년·외국인 및 이주민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확대 하여 일반 국민의 법령 접근성 보장 및 법의식 제고

* '26년 예산 1,474백만원 → '27년 요구 1,692백만원(증 218백만원, +14.8%)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심사지원

- 법령안의 입법지원, 심사, 국회제출 및 공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법제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과 법령 입안 및 적용 현장에서의 적극행정 법제 확산 지원

- 법령입법지원

-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정부 정책이 입법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필요한 입법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
- 적절하고 신속한 입법 기준 마련을 위해 해외 입법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입법사례 등을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연구 기능 강화
-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이 적시에 법제화되도록 입안단계부터 법제 전문가가 조문화를 지원하고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등 입안 과정의 효율화를 도모

* '26년 예산 296백만원 → '27년 요구 306백만원(증 10백만원, +3.4%)

○ 법제정비 사업

- 법령정비

- 경기회복 지원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 경감과 재도약을 지원하고, 청년·사회적 약자의 공정한

기회 보장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국민·기업의 자유롭고 유연한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령 정비 추진 필요

- 제도운영 현황,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 및 구체적 정비안 제시를 통해 정비방향에 대한 부처의 수용률과 정비율 제고 추진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법령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 하여 사회 수요에 대한 법제환경 구축 강화
- 발령 전 행정규칙의 사전검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규칙 행정예고안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위법·불합리한 행정규칙에 대한 검토의견 신속 회신
- 발령 후 운영 중인 행정규칙을 분야별로 전수 검토하여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이탈 행정규칙을 발굴 및 정비하고, 법제도 개선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관련 분야 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 등을 선정하여 중점적 기획정비 추진
- 행정규칙의 사전통제 방식 개선 등 전반적인 행정규칙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추진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자치법제상담 119, 필수 위임조례 통보 및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등 기존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추진
-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사례집 등 간행물을 지속 발간 · 배포하고, 변화하는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개정 · 배포
- 지방정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령정비 제안창구 운영 추진

- 알기 쉬운 법제구축

- 부처협의안 전수 검토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을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 사전 차단
-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안, 의원입법 법률 예비 검토의견서, 지방정부 조례안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상시 검토 수행
- 국민 상당수가 법령 용어뿐만 아니라 법령 문장 및 법체계의 전문성·복잡성으로 법령을 어렵게 느끼는 현실에 따라, 법령 정비 방식을 ‘문장

· 체계 정비 및 국민체감형 관련 법령 정비'로 확대하여 국민의 실질적 법령 이해도 증진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법령안 작성 단계에는 사전적으로 쉬운 문장으로 입안되도록 지원하고, 정비 단계에서는 어려운 문구의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표준화된 알기 쉬운 법령안을 도출하는 자동생성 지원 체계를 도입

* '26년 예산 1,145백만원 → '27년 요구 1,555백만원(증 410백만원, +35.8%)

○ 행정법제 혁신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기본법」 및 국가 행정법 체계의 개선, 법령 정비 등을 위한 자문 의견 수렴
- 현행 법령 및 행정법체계 공통제도를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에 미치는 각종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 정비 추진에 활용하는 입법영향분석 실시

* '26년 예산 303백만원 → '27년 요구 1,076백만원(증 773백만원, +255.1%)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 ISP('24)에 따라 법령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도입하고 법령정보 정확성 제고 프로그램(RAG)을 개발하여 법조문,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26~'28)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등은 하지 않고 객관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범위를 정함

*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2차년도) '27년 요구 3,741백만원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 정부의 모든 법제업무를 통합·관리하고 하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결과에 따라 법령해석, 의원입법 지원, AI 챗봇 상담 등 2차년도 시스템 개발 추진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2차년도) '27년 요구 5,095백만원

-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AI 기반 대화형 검색서비스 제공 및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제작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 체계 마련('27년)

- *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2차년도) '27년 요구 1,000백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한 어플리케이션(AP) 이관
 - '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장애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요성이 입증된바, 내구연한(6년)에서 4년 초과한 노후 서버를 선제적으로 교체하여 잠재적 장애 요인을 제거
 - 또한, 법령정보 현행화 편집기 프로그램에서 사용 중인 보안 취약성이 있는 ActiveX(한글 OCX)를 제거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 * 어플리케이션(AP, Application)은 소프트웨어(SW)를 의미하는 것으로, AP 이관은 서버 장비 교체에 따라 내부에 저장된 SW를 신규 장비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법령심사·해석·정비 등 법제 업무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AI·빅데이터 기반 분석 기능을 갖춘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발 추진('27)
- 내부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AI 서비스 제공
 -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통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
 - *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은 행정안전부 공공AI 사업의 일환으로서, 행정업무에 민간의 AI 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웹 기반의 업무환경 제공 서비스
- 세계법제정보센터 개편 및 고도화
 - 세계법제정보센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6)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UI/UX 개선 및 AI 기반의 고도화된 탐색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추진('27~'30)
 - * '26년 예산 20,771백만원 → '27년 요구 27,795백만원(증 7,024백만원, +33.8%)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 태안 법제교육원은 실습·체험 중심의 장기 과정을, 서울 법제교육센터는 강독·핵심 중심의 단기 과정을 각각 담당하여 교육기관 특성에 따른 과정의 차별화 추구
- 안정적인 교육수요 창출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 및 의회의 기관별 수요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식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기관연계과정 설계·운영
- 헌법 교육 강화를 위해 헌법 교육 관련 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중앙·지방 공무원, 특히 군인·경찰, 소방,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과정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여 공직사회 헌법가치 확산

- 지방의회 의원 및 정책지원관 법제연수과정을 확대·개편하고, 지방정부·교육청 집행기관, 의회의원·직원 등의 교육 과정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역량 강화
 - 이론 중심에서 사례 중심으로 강의안을 개편하고 사례 중심 과정을 확대 개설하는 등 공직자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교육 내용 구성 추진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주요 법령 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의 법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 지속 실시
- * '26년 예산 2,742백만원 → '27년 요구 3,051백만원(증 309백만원, +11.3%)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EU국가 등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선진·미래 법제 분야에 대한 논의 확대
 - 아시아 정부기관 간 공통 법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상시·지속적인 법제교류를 위하여 설립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규모 및 위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 * '26년 예산 430백만원 → '27년 요구 568백만원(증 138백만원, +32.1%)

< 법제처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26예산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계	605.9	728.0	655.3	621.4	640.8	1.7
○ 예 산	605.9	728.0	655.3	621.4	640.8	1.7
【일반지방행정분야】	605.9	728.0	655.3	621.4	640.8	1.7
▪ 일반행정 부문	605.9	728.0	655.3	621.4	640.8	1.7

<참고> '25~'29계획 vs '26~'30계획 대비표

구분	'26~'30 계획	'25~'29 계획
여건변동 사항	▪ 대국민 소통 강화 및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국무회의 등 주요 정책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으며, 생중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가 ▪ 낮은 용역비용으로 인하여 어린이·청소년법제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개선 한계 및 활동 참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 발생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기기 등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시각 정보 중심의 콘텐츠 소비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 콘텐츠 고도화 및 AI 기반 검색서비스를 통한 이용 편의성 증진 ▪ K-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출 기업의 해외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 ▪ 급증하는 해외 법령정보 수요에 발맞춰 서비스 개편 및 해외 법령정보의 질적·양적 확대 필요 ▪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방문자 수 및 콘텐츠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현행화 주기 단축 필요성 증대 ▪ 정부 정책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처의 법령 입안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 검토 등 조문화 지원 필요성 및 관련 수요 증가 ▪ 고물가와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청년·소상공인·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추진 필요	▪ 홍보 매체가 다양해지고, 온라인 정보의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필요성 증대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참여자가 증가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임금상승률 대비 낮은 용역비용으로 양질의 입법체험 활동 제공에 어려움 발생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콘텐츠 고도화 및 서비스 방식 개선 추진 필요 ▪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 진출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K-푸드·K-의료 등 해외법령정보 제공 분야 확대 ▪ 급변하는 해외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해외법령정보 제공 강화 필요 ▪ 신속하고 정확한 생활법령정보 제공을 통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필요 ▪ 한국은 OECD 기준 다문화국가(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생활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해석하여 영어 등 다국어로 법령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증대 ▪ 국정과제, 민생 법령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입법 지원 필요 ▪ 시급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부처의 법령입법지원 수요가 증가하여 법령입법지원 제공 확대 필요 ▪ 사업형태의 디지털 전환, 1인 사업자 증가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활발한 사업 진출과 운영을 지

- 사회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법령 개선 과제 발굴을 통한 법제 환경 구축 필요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여러 일괄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산발적인 정비로, 정부입법에서 자치입법권 보장을 내재화하는 체계 마련 필요
-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성장 국정기조에 맞추어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현장의 법령정비 수요 증가
-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여전히 법령을 여전히 어렵게 느끼고 있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적절한 문장 생성·제공 가능성 증대
-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법 체계 정비 지속 추진 필요
- 행정법체계 공통 제도(예: 신고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면밀한 제도 운영 실태 파악 및 법령 개선 사항 발굴 필요
- '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장애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요성이 입증된바, 내구연한(6년)에서 4년 초과한 노후 서버를 선제적으로 교체하고,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 및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등 잠재적 장애 요인에 사전 대응 필요
- 법령심사·해석·정비 등 법제 업무 지원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필요
- 정부의 모든 법제업무를 지원하는 정부입법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 및 AI 등 신기술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필요
-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방문자 수 및 콘텐츠 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른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현행화 필요성 증대
- K-산업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됨에

원하고, 청년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법령 정비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 제고 필요

- 지방분권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활동 증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치법제 지원에 대한 수요 지속적 증가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법체계 전환 필요성 증가
-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1) 및 개정('22, '25)에 따라,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법 체계 개선을 지속하고, 「행정기본법」 관계 법령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
- '23년 이후 AI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생성형 AI 서비스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
- 정부의 모든 법제업무를 지원하는 정부입법시스템(1등급)의 노후화로 안정적인 운영 및 신기술 반영 등이 어려워 체계적인 개선 필요
- 신속하고 정확한 생활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실시간 현행화 필요성
- 법제교육시스템 구축으로 기관 보유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증가
-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건수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나 처리대장 및 현황 관리가 미흡한 등 이의신청 제도 전반의 운영 개선 필요

	따라 해외 법령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바,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최신 해외 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민·기업의 대외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 ▪ 태안 법제교육원과 서울 법제교육센터의 차별화 전략, 교육기관별 수요에 맞춘 기관연계화정의 확대,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헌법가치 확산을 위한 헌법교육 강화 필요 ▪ 아시아 지역 내 법제정책 협력, 법령정보 공유 등 법제교류협력을 지속 강화하면서도, 급속한 기술 및 사회변화에 대응한 법제 구축을 위하여 선진국과의 법제교류를 확대할 필요	▪ '26년부터 법제교육원 연 관리비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예산 확보 필요,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원 및 정책지원관 대상 법제연수·교육과정 확대 ▪ 대한민국의 법제 사례를 배우기 위한 아시아 국가의 법제교류협력 요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제교류협력의 체계화·고도화 필요
중기 투자 방향	일반 행정 부문 ▪ 주요 법령·법제정책을 신속·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월간 업무보고 회의, 법제 개선 현장간담회, 주요 정책 브리핑 등 현장 생중계 확대 추진 ▪ 임금상승률, 입법체험활동 실시 현황 등을 반영하여 일반용역비를 현실화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법제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청소년법제관 활동시기별 홍보 콘텐츠를 확충하여 참여의 다양성 및 편의 개선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시각콘텐츠의 활용도·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 ▪ 해외법령 번역량 확대를 위한 연구원 증원 및 해외법령 서비스 대상 언어권 추가(폴란드어, 헝가리어 등) ▪ 세계법제정보센터 개편 및 고도화를 위한 사용자 의견 청취 및 해외법령 데이터베이스 구축 ▪ 다양화·개인화되는 국민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필요한 생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활법령 정보 콘텐츠 개발 ▪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카드 뉴스 등 시각화 된 콘텐츠를 통한 쉽	▪ 법령 내용별 주요 소통 타겟을 정하여 해당 타겟층 대상 맞춤형 온라인 광고를 실시하고, 오프라인 홍보 매체에 대한 수요도 고려하여 오프라인 콘텐츠 제공 필요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참가 기관, 입법 체험활동 실시 현황 및 용역비용 단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사업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 도모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시각콘텐츠를 고도화하고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 추진 ▪ 해외 진출 국민·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해외법령정보 제공 범위의 확대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제공 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시의적절한 법령정보 제공 ▪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고,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품질 및 현행성 관리 강화 ▪ 외국인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개발을 확대하고,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고 간결한 법령정보 제공 ▪ 정부 내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안정적 정착과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입법 지원 시스템 고도화 ▪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며, 청년·사회적 약자 등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법령정비과제 발굴·정비 ▪ 사회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한 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법제적 지원 강화 지속 추진 ▪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자치법제상담 119,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의 지속 운영·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법제 활동을 입체적으로 지원 ▪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등을 지속 발간·배포하고, 자치법제담당자 역량 발전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지방정부의 자치법제 관련 전문성 제고 추진 ▪ 지역 현장의 법령정비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여 직접 법령개정으로 연계하기 위한 법령정비 제안창구 운영 내실화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법령안 작성 단계에는 사전적으로 쉬운 문장으로 입안되도록 지원하고, 정비 단계에서는 어려운 문구의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표준화된 알기 쉬운 법령안을 도출하는 자동생성 지원 체계를 도입 ▪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선·보완,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지속 및 입법영향분석 확대를 통한 행정법제 전반의 개선 추진 ▪ 재난·장애 상황에서도 법령정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인프라 안정성 강화와 함께 시스템 운영 구조를 단	츠 제작 ▪ 입법절차 전반의 원활한 추진과 법제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 ▪ 부처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법령입법지원, 주요 정책 현안 관련 특정 부처와 상시 협업 등 적극적 입안지원 추진 ▪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 청년 및 사회적 약자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기업의 자유롭고 유연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령 정비 추진 필요 ▪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등 기존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활동을 위한 사례집 등 간행물의 지속 발간·배포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개정 주기 단축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치법제담당자 역량 발전회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해외의 다양한 자치입법권 관련 사례의 국내 시사점 논의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정례화 추진 ▪ 사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확인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및 점검 필요 ▪ 인공지능 관련 법제 지원 등 미래 신기술 확산을 위한 법제적 지원 강화 지속 추진 ▪ 「행정기본법」 제정·개정 당시 반영되지 못한 사항, 신기술 출현 등 사회 변화에 따른 「행정기본법」 개정 관련 신규의제에 관한 조사·연구 추진 ▪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기대수준(챗GPT)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입법배경,
--	--

	계적으로 고도화하여, 신뢰성 높은 대국민 법령정보 제공 기반 조성 ▪ 법령심사·해석·정비 등 법제 업무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AI·빅데이터 기반 분석 기능을 갖춘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결과에 따라 시스템 개발 추진('27~'28)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른 이행과제의 단계적 추진으로 AI를 활용하여 지능화·자동화된 사용자 중심의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른 2차 사업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AI 기반 대화형 검색서비스 제공 및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제작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지원 체계 마련 ▪ 세계법제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26), 이를 통해 도출한 이행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27년~'30년) ▪ 법제능력 향상을 위한 기관별 수요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안정적인 교육수요 창출을 위한 기관연계과정 적극 유치, 헌법가치 확산을 위한 헌법 교육 강화 추진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체계적 운영 및 점진적 확대	관련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요약하여 제공 ▪ 법제업무 추진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유형별로 관리하여 데이터 연관관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법제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따른 이행과제의 단계적 추진('26년~'28년) ▪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른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통합시스템 구축·개발 추진 ▪ 기관 보유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관리 체계 구축 ▪ '이의신청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따른 이행과제의 단계적 추진('26년~'28년) ▪ 자치입법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정책지원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연수·교육과정 확대 실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 ▪ 아시아 법제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과 체계적인 법제교류협력 추진
--	---	--

4. 성과목표(지표)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전략목표 I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다.					
프로그램 목표	I -1. 정부입법의 체계적 관리와 법제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정부정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실용적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25(실적)	'26	'27	'28	'29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만족도 (정보화)(점)	88.8	89.1	89.2	89.3	89.4	89.5

Ⅲ. 재정혁신 추진계획

1. 재정여건

(1) 지출증가 소요

- ☐ K-산업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번역본 확대 제공 관련 예산 확대
 - 국가별 법령정보 이용자 수, 법령 번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언어권별 번역연구원을 증원하고, 법령 번역본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분야 지출 증가 예정
-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 구축 관련 정보화 예산 확대
 - 국내·외 법제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을 통해 법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AI 법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출 증가 예정

(2) 지출 구조조정 소요

<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총괄표 >

구 분	평가 결과	구조조정 계획
재정사업 자율평가	· ('25) 미흡평가 사업 없음	해당사항 없음
	· ('24) 미흡평가 사업 없음	해당사항 없음
	· ('23) 미흡평가 사업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지출구조 혁신과제 추진계획

- ☐ 사업 효과성·타당성 미흡 대상에 대한 원점재검토 실시
 - (개요) 사업 타당성·효과성에 대해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을 받거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을 원점 재검토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시
 - (추진 실적) '26년 예산 편성 시 유사·중복되는 비용을 통·폐합하고 사업 운영 효율화를 통해 감액을 추진하는 등 지출구조 조정 실시
 - * 연례적 행사비, 홍보비 폐지 및 유사 경비 통합·활용을 통한 기존 예산 절감 등
 - (향후 추진 계획) 국정감사, 예·결산 등에서 지적된 사업의 타당성

과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27년 단년도 예산 편성 시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등 재정 건전화 추진

3. 기타 재정혁신과제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1. 지출계획 총괄표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기금)	단위사업	'26 예산	'27	'28	'29	'30
일반·지방행정					60,588	72,796	65,534	62,142	64,083
일반행정					60,588	72,796	65,534	62,142	64,083
▪ 정부입법 총괄·지원					60,588	72,796	65,534	62,142	64,083
(일반) 본부인건비					24,948	26,694	28,563	30,562	32,701
(일반) 본부기본경비					5,377	5,539	5,705	5,876	6,053
(일반) 법제정보서비스					4,526	6,112	6,304	6,416	6,435
(일반) 정부입법 총괄관리					1,744	2,937	2,969	3,003	3,035
(일반) 법제업무정보화지원 (정보화)					20,771	27,795	18,359	12,598	12,148
(일반) 법제전문성향상					3,172	3,619	3,534	3,587	3,611
(일반) 정책연구개발					50	100	100	100	100
□ 총지출(A)					60,588	72,796	65,534	62,142	64,083
※ 내부거래지출(B)					-	-	-	-	-
보전지출(C)					-	-	-	-	-
□ 총 계(A+B+C)					60,588	72,796	65,534	62,142	64,083

2. 지출변동 내역

(1) 법제처 지출변동 개요

□ '25~'29계획 대비 '26~'30계획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5.7%p 감소

○ '26~'30계획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7%로 '26년 예산이 '25년 대비 큰 규모로 증가하여 '25~'29계획 대비 연평균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나, 세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지출 규모는 증액하여 계획 수립

▪ K-산업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번역본 확대 제공 관련 증액 소요를 반영하고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AI 기반 법제 서비스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평균 57.4억원 수준으로 증가

< 법제처 지출변동 총괄표 >

(단위 : 억원, %)

구 분	'25	'26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 총 지 출							
▪ '25~'29 계획(A)	457.3	603.4	588.2	581.2	608.5		7.4
▪ '26~'30 계획(B)		605.9	728.0	655.3	621.4	640.8	1.7
증감(B-A)		2.5	139.8	74.1	12.9		
○ 예 산							
▪ '25~'29 계획(A)	457.3	603.4	588.2	581.2	608.5		7.4
▪ '26~'30 계획(B)		605.9	728.0	655.3	621.4	640.8	1.7
증감(B-A)		2.5	139.8	74.1	12.9		
【일반행정지방 분야】							
▪ '25~'29 계획(A)	457.3	603.4	588.2	581.2	608.5		7.4
▪ '26~'30 계획(B)		605.9	728.0	655.3	621.4	640.8	1.7
증감(B-A)		2.5	139.8	74.1	12.9		
<일반행정 부문>							
▪ '25~'29 계획(A)	457.3	603.4	588.2	581.2	608.5		7.4
▪ '26~'30 계획(B)		605.9	728.0	655.3	621.4	640.8	1.7
증감(B-A)		2.5	139.8	74.1	12.9		

(2) 부문별 지출변동 세부내역

① 일반행정 부문

- 법제처는 일반행정 부문 1개로 구성되어, '26~'30계획 총지출은 '25~'29 계획 대비 연평균 증가율 5.7%p 감소
- '26~'30계획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7%로 '26년 예산이 '25년 대비 큰 규모로 증가하여 '25~'29계획 대비 연평균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나, 세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지출 규모는 증액하여 계획 수립
 - K-산업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번역본 확대 제공 관련 증액 소요를 반영하고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AI 기반 법제 서비스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평균 57.4억원 수준으로 증가

< 일반행정 부문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25	'26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일반행정 부문>							
▪ '25~'29 계 획(A)	457.3	603.4	588.2	581.2	608.5		7.4
▪ '26~'30 계 획(B)		605.9	728.0	655.3	621.4	640.8	1.7
증감(B-A)		2.5	139.8	74.1	12.9		
(정부입법총괄지원프로그램)							
▪ '25~'29 계 획(A)	457.3	603.4	588.2	581.2	608.5		7.4
▪ '26~'30 계 획(B)		605.9	728.0	655.3	621.4	640.8	1.7
증감(B-A)		2.5	139.8	74.1	12.9		

참고 1**완료사업 전체 리스트(총지출 기준)**

- 해당사항 없음

참고 2**신규사업 전체 리스트(총지출 기준)**

- 해당사항 없음

참고 3**보조사업 전체 리스트**

- 해당사항 없음

3.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1) 법제처 의무·재량지출 개요

(1-1) 의무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해당사항 없음

(1-2) 재량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26~'30계획 재량지출 규모는 연평균 650.3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1.7%)

< 재량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26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 재량지출 >	605.9	728.0	655.3	621.4	640.8	1.7
▪ '26~'30 계획	605.9	728.0	655.3	621.4	640.8	1.7
【 일반·지방행정 분야】	605.9	728.0	655.3	621.4	640.8	1.7
▪ '26~'30 계획	605.9	728.0	655.3	621.4	640.8	1.7
(일반행정 부문)	605.9	728.0	655.3	621.4	640.8	1.7
▪ '26~'30 계획	605.9	728.0	655.3	621.4	640.8	1.7

(2) 의무·재량지출 관리계획

① 의무지출 관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② 재량지출 관리계획

- '26~'30계획 재량지출 규모는 연평균 650.3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1.7%)
 - '26년 예산이 '25년 대비 큰 규모로 증가하여 '25~'29계획 대비 연평균 증가율은 감소($\Delta 5.3\%p$)하였으나, 세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지출 규모는 증액하여 계획 수립

4. 국정과제 추진계획

(1) 법제처 국정과제 개요

- [국정과제 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 개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의견을 취합·조정하여, 개헌안 마련 지원
- [국정과제 6-1]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개혁
 - 정부 내 법령해석, 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공개
- [국정과제 9-1]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정부·국회 및 여·야·정 협치
 - 정부 내 입법전략 관리체계 구축, 입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입법 총괄·조정
- [국정과제 13-1]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 공직사회 책임성 강화
 - 법제교육원 활용, 헌법가치 교육 확대 실시
- [국정과제 24-1]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 30대 핵심과제 추진
 - AI 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로 ‘법제처 AI 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한 국민 모두의 법 접근성 강화’ 선정·추진
- [국정과제 52-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 자치입법권 강화
 -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 자치입법권 침해 행정규칙 사전차단 등
- [국정과제 61-3]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 경영 부담 완화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
- [국정과제 100-1]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 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강화
 - 학교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법제처 헌법교육

프로그램 공유·협업(법제교육과)

- [국정과제 103-4]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산업전략화 추진 -
한류 연관 산업 글로벌 도약
 - 한류 콘텐츠 및 연관 산업의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의 맞춤형 제공

(2)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국정과제 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 (주요 실적) 개헌을 위한 절차적 기반인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심사 진행 등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헌재 2009헌마256 결정 등)
 - (향후 계획)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등 개헌 추진 시 개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의견을 취합·조정하여, 개헌안 마련 지원
- [국정과제 6-1]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 (주요 실적) 기관별 산재되어 있던 교육부, 식약처, 산림청 등 31개 기관*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지방세 판례 등의 정보를 AI 활용 및 데이터 친화적 형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25.11.24.)
 - * 결정선례 개방 참여 중앙행정기관(누적): (‘22) 3개 → (‘23) 5개 → (‘24) 13개 → (‘25.11.) 44개
 - (향후 계획) 중앙행정기관별 법령해석·질의회신 사례 공개 유형별 현행화 및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등록·개방 협조 요청
- [국정과제 9-1] 정부와 국회의 협치 체계 구축
 - (주요 실적) 정부입법계획(‘25. 1월) 및 주요 계기 시 정부입법 수정 계획(‘25. 9월) 수립을 통한 정부입법 활동의 체계적인 총괄·조정
 - (향후 계획)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수시 조정 및 반기별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를 통한 법령 담당자 간 협력 지속
- [국정과제 13-1] 국민에게 충직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 정립 - 법제교육원 활용, 헌법가치 교육 확대 실시
 - (주요 실적) 태안 법제교육원 및 서울 법제교육센터에서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헌법과 법령·자치법규 입안 과정 확대 운영, 지방순회교육 및 맞춤형교육을 통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헌법 교육 실시

- (향후 계획) 헌법과 행정실무를 연계한 신규 과정 개설 등 공무원 대상 헌법 강의 확대, 군인·경찰·소방·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운영

○ [국정과제 24-1]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 30대 핵심과제 추진

- (주요 실적) 법령용어와 일상용어와의 관계, 법령간 관계 정보를 규정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단어나 문장으로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대국민 개통('24.12.) 및 기능 고도화('25.12.)
- (향후 계획)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법령, 판례·해석례 등 정확한 법령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로의 전환

○ [국정과제 52-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 (주요 실적) ①중앙·지방 협업을 통해 지방 관련 국가정책을 논의·수립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자 참여를 위한 법령 정비 실시(24개 법률, 20개 대통령령), ②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행정규칙 사전(행정예고안 전수 검토 시범운영, '25.9~)·사후(자치권 침해 대상 행정규칙 기획정비)검토·심사를 추진
* (행정예고 사전검토) 5개 행정규칙 16건 / (사후심사) 4개 행정규칙 16건
- (향후 계획) ①지역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정비과제를 발굴, 중앙지방 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을 통해 신속 정비 추진, ②사전(행정예고안) 검토 대상 부처를 확대(3개→5개 부처) 운영하고, 유형별 자치입법권 침해 사례를 발굴하는 등 사후심사 병행
* ('25년) 국토부, 중기부, 농식품부 ⇒ ('26년) 해수부 및 복지부 추가 ('27년) 숏부처

○ [국정과제 61-3]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 경영부담 완화

- (주요 실적) 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법령정비(대통령령 49개) 완료('25.12.23. 공포)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담금·사용료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정비(법률 5개, 대통령령 8개, 부령 4개) 완료(법률 '25.12.24. 국회제출, 대통령령·부령 '25.12.30. 공포)
- (향후 계획)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 관련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 추진

- [국정과제 100-1] 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강화
 - (주요 실적) 헌법가치 확산을 위한 “헌법과 법제” 온라인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 자료를 제작·대국민 공개
 - (향후 계획) 사례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헌법 교육 콘텐츠 추가 개발·제공, 헌법 교육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시민사회 헌법 교육 실시
- [국정과제 103-4]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산업전략화 추진 - 한류 연관 산업 글로벌 도약
 - (주요 실적) 수출이 유망한 K-산업 분야별로 유관 부처·기관과 협업하여 기업의 해외 법령정보 수요를 조사하고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
* '25년 '화장품', '식품' 등 7개 분야 879건 제공(누적)
 - (향후 계획) 산업 분야별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제공 분야로 '26년 '패션' 등 3개 분야 추가

V. 프로그램별 설명서

정부입법 총괄 지원

(분야)일반 · 지방행정 - (부문)일반행정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업목적

○ 법령정보제공 사업

-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개정 법령안, 시행법령 및 법제처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 및 이미지 콘텐츠(만화, 카드뉴스 등)를 제작, 파급력 있는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입법 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 제공
- 어린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및 법령퀴즈 골든벨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여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민주 시민사회의 기반 마련
-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그림, 사진, 체계도 및 표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시각자료 형태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기존 법령정보와 함께 제공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세계법제 연구지원
 - 해외법령, 법제동향 등 세계법제정보를 요약 · 번역하여 국가별 · 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기업·정부의 대외경제활동 지원
 -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령 번역 수요조사를 실시, 연간 법령번역계획을 수립 · 관리하고 국가법령 외국어 번역 업무의 총괄 · 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부처 간 중복 번역의 비효율성 해소
- 남북법제 연구
 - 통일에 대비한 분야별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국가 형성에 이바지

- 남북 간 상이한 법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별로 구분된 법령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
-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조례 정보를 생활 주제별로 재구성하고, 법령과 연계함으로써 완결성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
- 국내 거주 외국인(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등)이 정착에 필요한 법령을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12개국 언어로 번역·해설한 법령정보 제공
- 정보취약계층(노년층, 저소득층 등)이 개인상황별로 필요한 법령·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생애주기별·주제별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국내 법령 검색·이해 지원을 위한 맞춤형 다국어 서비스 실시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민생·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법제 업무를 지원·점검하고, 적극행정 법제가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의 내용 및 기준을 일선 공무원에게까지 전파
- 법령입법지원 사업
 -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정부 정책이 입법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필요한 입법 기준을 마련
 -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령안에 대해 법제 전문가가 입안 단계부터 조문화를 지원하고 법리적 쟁점 검토를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입법 추진을 도모
 -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입법 기준 마련 등 입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기능 강화

○ 법제정비 사업

- 법령정비 사업
 - 소상공인·청년·사회적 약자 등 정책대상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자료 검토·분석을 통해 법령 속 불합리한 규제 및 불편 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정비

-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과제 발굴
- 사회 변화에 따라 미래에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분야 및 행정입법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 연구를 통해 선제적 법제 지원 추진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사업

-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조례-규칙간 위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조화 되도록 하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해석 및 정비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

-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자치법규 등을 정비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 조성
-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침으로써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던 법령을 일반 국민 위주의 법령으로 전환

○ 행정법제 혁신

-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개선·보완 사항, 사회 발전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법제 정립, 규제개혁 등 행정법령 전반의 혁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행정법제 보완·발전 연구
-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에 미치는 각종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 정비 추진 강화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 구축·서비스하고, 생성형 AI 검색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분석하여 법령, 판례 등 관련 종합법령정보를 한 화면에서 제공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화면 레이아웃을 고도화하여, 정보취약계층도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서버 장비 중 사용연한이 경과된 노후 서버를 교체하고, 보안 취약점(Active-X)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국가 법령정보센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 법령심사·해석·정비 등 법제 업무를 데이터 기반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통합 관리하고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AI·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법제 업무 지원
- 법령안 입안·심사, 법령해석, 자치입법 및 의원입법을 지원하는 정부 입법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및 지능화·자동화 적용을 통해 행정기관의 법제업무와 국민의 입법참여 등의 효율적·안정적 지원
-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이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마련
- 전산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외부 공격으로부터 처내 내부자원을 보호하여 안전한 법제업무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 (법제교육)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법제 실무자의 법령 입안 및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관련 법령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적·체계적인 법제교육 실시
- (행정효율성증진 및 법제전문성 향상)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입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법제실무인력의 자발적 연구·학습활동 지원 및 주요 법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식교류 활성화
- (청년인턴 제도 운영)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23.1.,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라 국내·외 유능한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국정참여 및 실무경험 등 다양한 일 경험 기회 제공과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대한민국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법제발전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여

해당 국가의 법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법제 선진국과의 상호 방문, 영상회의 등을 통해 기술·사회 변화에 대응한 법제 구축 지원

- 아시아 각국의 민·관·학 법제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학술포럼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법제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기반을 구축
- 아시아 각국의 법제 담당기관 간 협의체로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 아시아 법제 공동 발전을 위한 법제정책, 법령정보 등 분야의 협력 추진

□ 기대효과

○ 법령정보제공 사업

- 입법예고 중인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령 및 주요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준법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및 법치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하여 국민 중심 법률문화 조성에 기여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개별법령의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및 용어에 대해서 그림·사진·표 등의 시각자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해당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기여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세계법제 연구지원

- 세계 각국의 법령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지원
- 국민·기업의 신청을 받아 해외 법령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 수립 및 번역 기준을 기반으로 한 감수를 통해 국내 법령의 중복 번역으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및 번역 품질 제고

- 남북법제 연구

- 남북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으로 향후 남북 관계 진전 시 실질적 교류·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남북법제 유관 기관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결과를 축적·관리하여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및 점진적 관계 개선의 기반 마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을 일상생활 분야별로 분류하고 해설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법령 접근성 보장 및 법 인식 제고
- 생애주기별·주제별 맞춤형 서비스, 카드뉴스·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책 이해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의 국내 법령 검색·이해를 지원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이주민의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국내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건전한 다문화사회 발전의 기반 마련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심사지원 사업
 - 신속한 입법지원을 통해 민생·국정과제 정책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도모
 - 법제업무 지원을 통해 부처 친화적인 법제업무 환경 구축 및 법제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일반에서의 적극행정 법제의 정착·활용을 확대
- 법령입법지원 사업
 - 다양한 조사·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입안과 심사 과정을 효율화하고 올바른 법제 문화 정착에 기여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추진 법령안 등에 대한 입안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정책의 적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법제정비 사업

- 법령정비 사업
 - 국민·기업 등의 경제활동이나 공정·상생 사회 구현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 청년·사회적 약자 등 정책대상자의 경제활동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 및 공정·상생 가치 실현에 기여
 -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법제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

의 입법참여 수단 확대를 통해 정부입법과정의 민주성을 제고

-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법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국정성과의 조기 창출에 기여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사업
 - 지방정부 자치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법체계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강화 및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 실현 강화에 기여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
 - 국민이 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함
 - 공무원·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발생하는 법 접근성 및 법령 활용에 대한 차별을 해소

○ 행정법제 혁신

- 국가 행정법체계 정비,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좋은 법 만들기 등을 통해 국민 권리보호 강화,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제도(이의신청·재심사·제척기간)의 안착과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 권리구제 강화에 기여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법령 내 키워드를 알지 못하더라도 문장형 질의를 통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필요한 종합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반응형 웹으로 전환하고, 노후장비 교체와 보안취약점 제거 등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대한민국 대표 법령 검색 시스템으로서의 신뢰성 확보
- 법령심사·해석·정비 등 법제 업무와 관련된 처내 정보시스템에서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I·빅데이터 기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과학적 법제 행정 지원
- 법제업무 처리의 전자적 지원 및 자동화·지능화를 통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안전성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

-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이용자가 획득 가능한 주제별 생활법령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대국민 AI 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법령 접근성 제고
- 사이버 위협 및 재해·재난을 대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보안 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 보안성 강화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 (법제교육)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법제전문성 강화,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헌법가치·법치주의 확산으로 공직신뢰도를 높여 국정 현안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기대
- (행정효율성증진 및 법제전문성 향상) 복잡·다양해진 입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계와 실무자간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식교류 활성화 및 법제처 내 자발적인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공유·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조직화 도모
- (청년인턴 제도 운영) 청년세대에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업무능력 강화 및 국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외국 법제기관과 정례적 정책 및 인사교류 강화, 법령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한국 법제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우리 법제에 기반한 무형의 사회기반시설(Invisible SOC)을 정착시킴으로써 해외진출 기업과 해외 거주 국민들에게 거주 및 투자 친화적 여건 조성
- 다양한 분야별 법제 선진국과의 법제교류를 통해 기술 및 시대 변화에 대응한 법제를 효과적으로 구축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의 지속적인 개최 및 아시아 법제 기구 협의체(CALI)의 운영·확대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미래 법제 현안 논의 및 아시아 법제 발전을 위한 경험·정보 공유 등 추진

	'24실적	'25실적	'26	'27	'28	'29	'30
▪ 국가법령정보							
센터 이용자	88.9	88.8	89.1	89.2	89.3	89.4	89.5
만족도(정보화)							

(2) 프로그램 내역

(단위 : 백만원, %)

	'26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정부입법 총괄·지원(프로그램)	60,588	72,796	65,534	62,142	64,083	1.7
<일반>	60,588	72,796	65,534	62,142	64,083	1.7
☐ 본부인건비(단위사업)	24,948	26,694	28,563	30,562	32,701	7.0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24,948	26,694	28,563	30,562	32,701	7.0
☐ 본부기본경비(단위사업)	5,377	5,539	5,705	5,876	6,053	3.0
▪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1,784	1,838	1,893	1,950	2,009	3.0
▪ 기관운영기본경비	3,593	3,701	3,812	3,926	4,044	3.0
☐ 법제정보서비스(단위사업)	4,526	6,112	6,304	6,416	6,435	9.2
▪ 법령정보제공	1,436	1,563	1,580	1,598	1,615	3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616	2,857	3,030	3,122	3,122	17.9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474	1,692	1,694	1,696	1,698	3.6
☐ 정부입법 총괄·관리(단위사업)	1,744	2,937	2,969	3,003	3,035	14.9
▪ 법령심사지원	296	306	314	323	331	2.8
▪ 법제정비	1,145	1,555	1,579	1,604	1,628	9.2
▪ 행정법제 혁신	303	1,076	1,076	1,076	1,076	37.3
☐ 법제업무정보화지원(단위사업)	20,771	27,795	18,359	12,598	12,148	△12.5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20,771	27,795	18,359	12,598	12,148	△12.5
☐ 법제전문성향상(단위사업)	3,172	3,619	3,534	3,587	3,611	3.3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2,742	3,051	2,966	2,994	3,018	2.4
▪ 외국법제기관교류	430	568	568	593	593	8.4
☐ 정책연구개발(단위사업)	50	100	100	100	100	18.9
▪ 법제정책연구개발	50	100	100	100	100	18.9

(3) 지출변동 내역 및 사유

① 법령정보제공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5급 강예지, 044-200-6515, 6급 임동혁, 044-200-6518)

(담당자: 5급 김규림, 044-200-6583, 6급 박부경, 044-200-6582)

(담당자: 5급 이형훈, 044-200-6855, 8급 유미진, 044-200-6772)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 법제 및 법령알리기: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개정 법령안, 시행법령 및 법제처의 주요 정책을 파급력 있는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입법 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 제공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운영: 법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초등학교 4 ~ 6학년 및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론마당, 법안만들기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제도 운영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자료를 함께 제공
사업기간	'0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령정보제공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5결산 ¹⁾	'26예산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25~'29계획 (증가율)	1,520	1,436 (△5.5)	1,272 (△5.9)	1,142 (-)	1,168 (-)		△6.4%
'26~'30요구 (증가율)		1,436 (△5.5)	1,563 (8.8)	1,580 (1.1)	1,598 (1.1)	1,615 (1.1)	3.0%

○ 세부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대국민 소통 강화 및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주요 법령·법제정책을 신속·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한 현장 생중계 확대 비용 75백만원 증액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참가 기관, 입법체험활동 실시 현황 및 용역비용 단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사업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 및 홍보 강화를 위해 45백만원 증액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6*	'25~'29 (당초) 1,436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844백만원 · 콘텐츠 기획 및 편집 12회 x 12.6백만원 · 온라인 홍보 12회 x 24.8백 · 신문 광고 6회 x 5.7백 · 간행물 발간 12회 x 3.3백 ·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x 20.75백 · 지원인력 보수 1명 x 39백만원 ·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등 운영비 34.6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357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운영 경비 20회 x 6.7백만원(1회 평균) · 입법 체험 행사 위탁 용역 1식 x 141백만원 · 지원인력 1명 x 40백만원 · 인쇄물(책자, 수료증 등) 제작 및 발송 1건 x 13백만원 ·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1건 x 9백만원 · 기타 운영비(국내여비 등) 20백만원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236백만원 · 인건비 2인 x 54백만원

'27			· 콘텐츠 개발 용역비 10개 법령 x 10.2백만원 · 홍보비 1회 x 6백만원 ·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20백만원
	'26~'30 (요구)	1,436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844백만원 · 콘텐츠 기획 및 편집 12회 x 12.6백만원 · 온라인 홍보 12회 x 24.8백 · 신문 광고 6회 x 5.7백 · 간행물 발간 12회 x 3.3백 ·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x 20.75백 · 지원인력 보수 1명 x 39백만원 ·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등 운영비 34.6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357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운영 경비 20회 x 6.7백만원(1회 평균) · 입법 체험 행사 위탁 용역 1식 x 141백만원 · 지원인력 1명 x 40백만원 · 인쇄물(책자, 수료증 등) 제작 및 발송 1건 x 13백만원 ·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1건 x 9백만원 · 기타 운영비(국내여비 등) 20백만원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236백만원 · 인건비 2인 x 54백만원 · 콘텐츠 개발 용역비 10개 법령 x 10.2백만원 · 홍보비 1회 x 6백만원 ·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20백만원
	'25~'29 (당초)	1,272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636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7백만원 · 광고제작비(디자인 개편 등) 6회 x 2백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x 283백만원 ·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x 17백만원 · 지원인력 보수 1명 x 34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18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318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운영 경비 20회 x 4.8백만원(1회 평균) · 입법 체험 행사 위탁 용역 1식 x 141백만원 · 지원인력 1명 x 39백만원 · 인쇄물(책자, 수료증 등) 제작 및 발송 1건 x 13백만원 ·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1건 x 9백만원 · 기타 운영비(국내여비 등) 20백만원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318백만원 · 인건비 2인 x 56백만원 · 콘텐츠 개발 용역비 10개 법령 x 11백만원 · 홍보비 1회 x 7백만원 ·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89백만원
	'26~'30 (요구)	1,563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921백만원 · 콘텐츠 기획 및 편집 12회 x 12.6백만원 · 온라인 홍보 12회 x 24.8백 · 신문 광고 6회 x 5.7백 · 간행물 발간 12회 x 3.3백 ·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x 20.75백 · 정책 현장 온라인 생중계 15회 x 5백 · 지원인력 보수 1명 x 41백만원

			·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등 운영비 34.6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402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운영 경비 20회 x 6.7백만원(1회 평균) · 입법 체험 행사 위탁 용역 1식 x 186백만원 · 지원인력 1명 x 40백만원 · 인쇄물(책자, 수료증 등) 제작 및 발송 1건 x 13백만원 ·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1건 x 9백만원 · 기타 운영비(국내여비 등) 20백만원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240백만원 · 인건비 2인 x 56백만원 · 콘텐츠 개발 용역비 10개 법령 x 10.2백만원 · 홍보비 1회 x 6백만원 ·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20백만원
'28	'25~'29 (당초)	1,142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571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7백만원 · 광고제작비(디자인 개편 등) 6회 x 2백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x 278백만원 ·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x 12백만원 · 지원인력 보수 1명 x 34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18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286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운영 경비 20회 x 4.8백만원(1회 평균) · 입법 체험 행사 위탁 용역 1식 x 120백만원 · 지원인력 1명 x 36백만원 · 인쇄물(책자, 수료증 등) 제작 및 발송 1건 x 10백만원 ·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1건 x 7백만원 · 기타 운영비(국내여비 등) 17백만원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285백만원 · 인건비 2인 x 57.6백만원 · 콘텐츠 개발 용역비 10개 법령 x 11백만원 · 홍보비 1회 x 7백만원 ·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53백만원
	'26~'30 (요구)	1,580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923백만원 · 콘텐츠 기획 및 편집 12회 x 12.6백만원 · 온라인 홍보 12회 x 24.8백 · 신문 광고 6회 x 5.7백 · 간행물 발간 12회 x 3.3백 ·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x 20.75백 · 정책 현장 온라인 생중계 15회 x 5백 · 지원인력 보수 1명 x 43백만원 ·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등 운영비 34.6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414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운영 경비 20회 x 6.8백만원(1회 평균) · 입법 체험 행사 위탁 용역 1식 x 188백만원 · 지원인력 1명 x 42백만원 · 인쇄물(책자, 수료증 등) 제작 및 발송 1건 x 15백만원 ·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1건 x 11백만원 · 기타 운영비(국내여비 등) 22백만원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243백만원 · 인건비 2인 x 57.6백만원

			· 콘텐츠 개발 용역비 10개 법령 x 10.2백만원 · 홍보비 1회 x 6백만원 ·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20백만원
'29	'25~'29 (당초)	1,168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584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7백만원 · 광고제작비(디자인 개편 등) 6회 x 2백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x 278백만원 ·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x 13백만원 · 지원인력 보수 1명 x 35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18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292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운영 경비 20회 x 4.8백만원(1회 평균) · 입법 체험 행사 위탁 용역 1식 x 126백만원 · 지원인력 1명 x 36백만원 · 인쇄물(책자, 수료증 등) 제작 및 발송 1건 x 10백만원 ·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1건 x 7백만원 · 기타 운영비(국내여비 등) 17백만원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292백만원 · 인건비 2인 x 59.3백만원 · 콘텐츠 개발 용역비 10개 법령 x 11백만원 · 홍보비 1회 x 7백만원 ·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56.4백만원
	'26~'30 (요구)	1,598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925백만원 · 콘텐츠 기획 및 편집 12회 x 12.6백만원 · 온라인 홍보 12회 x 24.8백 · 신문 광고 6회 x 5.7백 · 간행물 발간 12회 x 3.3백 ·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x 20.75백 · 정책 현장 온라인 생중계 15회 x 5백 · 지원인력 보수 1명 x 45백만원 ·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등 운영비 34.6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426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운영 경비 20회 x 6.9백만원(1회 평균) · 입법 체험 행사 위탁 용역 1식 x 190백만원 · 지원인력 1명 x 44백만원 · 인쇄물(책자, 수료증 등) 제작 및 발송 1건 x 17백만원 ·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1건 x 13백만원 · 기타 운영비(국내여비 등) 24백만원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247백만원 · 인건비 2인 x 59.3백만원 · 콘텐츠 개발 용역비 10개 법령 x 10.2백만원 · 홍보비 1회 x 6백만원 ·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20백만원
'30	'26~'30 (요구)	1,615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927백만원 · 콘텐츠 기획 및 편집 12회 x 12.6백만원 · 온라인 홍보 12회 x 24.8백 · 신문 광고 6회 x 5.7백 · 간행물 발간 12회 x 3.3백 ·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x 20.75백 · 정책 현장 온라인 생중계 15회 x 5백

		· 지원인력 보수 1명 × 47백만원 ·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등 운영비 34.6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438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운영 경비 20회 × 7백만원(1회 평균) · 입법 체험 행사 위탁 용역 1식 × 192백만원 · 지원인력 1명 × 46백만원 · 인쇄물(책자, 수료증 등) 제작 및 발송 1건 × 19백만원 ·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1건 × 15백만원 · 기타 운영비(국내여비 등) 26백만원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250백만원 · 인건비 2인 × 61백만원 · 콘텐츠 개발 용역비 10개 법령 × 10.2백만원 · 홍보비 1회 × 6백만원 ·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20백만원
--	--	---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23~'2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3	1,950	-	+8	1,958	1,890	-	68
'24	1,718	-	△2	1,716	1,643	-	73
'25	1,552	-	△18	1,534	1,520	-	14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국회 (‘22회계연도 결산)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연례적인 세목조정의 부적정	23년 예산에 홍보영상 제작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함
국회 (‘23회계연도 결산)	대상자별 다양한 맞춤 교육 방안 수립 및 수료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퀴즈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 및 비수도권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율 제고를 도모함
국회 (‘24회계연도 결산)	도식화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문 검토·선정 및 콘 텐츠별 내실화 필요	신규 개발 대상 법령·조문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외에 도 식화 필요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대상 법 령을 선정하였고, 소관 부처 의견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개발 대상 법령 수를 확대 하였음.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도 콘텐츠 초안을 대상으로 도식화 필요성·적합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음. 더불어, '21년부터 개발하여 제공 중인 기 존 콘텐츠에 대해서도 도식화 필요성·효 과성을 전수 재검토하여 61건의 개선 필 요 콘텐츠를 발굴하였고, 순차적으로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② 세계법제정보서비스(재량지출)

(담당자: 5급 김수진, 044-200-6826, 7급 김세호 044-200-6829)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 세계법제 지원 · (해외법령 검색 기능 개선* 관련 사용자 간담회) AI를 활용하여 해외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 * 대통령 지시사항('25.12.12. 법제처 업무보고)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언어권별 연구원을 통해 서비스 대상 국가·법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직접 신청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등 제공 · (법령 외국어 번역 총괄·관리) 정부 부처와 민간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연간 국내법령 번역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회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법령 번역 체계 구축 ○ 남북법제 연구 · (남북법제 연구)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분야별 남북한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의 한반도 구축에 기여 ※ 남북법제 연구용역 및 연구위원회 운영 · (대내외 정보제공과 소통 강화) 관계 부처 공동세미나 등을 통한 국내외 관련 기관·학계와의 협력 강화 ※ 법제처·법무부·통일부 지속적인 공동세미나 개최
사업기간	'04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 세계법제서비스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5결산	'26예산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25~'29계획 (증가율)	1,641	1,616 (-)	1,432 (△11.4)	1,285 (△10.3)	1,315 (2.3)		
'26~'30요구 (증가율)		1,616 (-)	2,857 (76.8)	3,030 (6.1)	3,122 (3.0)	3,122 (-)	17.9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6*	'25~'29 (당초)	1,616	- 세계법제 지원사업(1,500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1년) 1,410백만원 ※ 연구원 총 19명: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2,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2, 일본어, 베트남어2, 태국어, 마인어2, 독일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53백만원 ·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30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5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사업운영 1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16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1명) 51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과제×40백만원=4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4.3백만원=13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8백만원=8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4백만원
	'26~'30 (요구)	1,616	- 세계법제 지원사업(1,500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1년) 1,410백만원 ※ 연구원 총 19명: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2,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2, 일본어, 베트남어2, 태국어, 마인어2, 독일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53백만원 ·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30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5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사업운영 1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16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1명) 51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과제×40백만원=4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4.3백만원=13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8백만원=8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4백만원
'27	'25~'29 (당초)	1,432	- 세계법제 지원사업(1,316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1년) 1,226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53백만원 ·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30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5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사업운영 1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16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1명) 51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과제×40백만원=4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4.3백만원=13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8백만원=8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4백만원
	'26~'30 (요구)	2,857	- 세계법제 지원사업(2,690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민간위탁사업비(1년) 2,576백만원 ※ 연구원 총 23명: 영어3, 아랍어2, 러시아어2,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2, 일본어, 베트남어2, 태국어2, 마인어2, 튀르키예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53백만원 ·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집 발간(약 1,000부) 등 홍보=12백만원 ·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1과제×30백만원=30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2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5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사업운영 2백만원 · 차세대 세계법제 이용자 간담회 1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67백만원) · 석사급 남북법제 전문연구원(1명) 51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과제×40백만원=40백만원 · 남북법제 주석서 연구 1과제×50백만원=5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4.3백만원=13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8백만원=8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5백만원
'28	'25~'29 (당초)	1,285	- 세계법제 지원사업(1,169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1년) 1,079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53백만원 ·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30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5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사업운영 1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16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1명) 51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과제×40백만원=4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4.3백만원=13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8백만원=8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4백만원
	'26~'30 (요구)	3,030	- 세계법제 지원사업(2,861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민간위탁사업비(1년) 2,746백만원 ※ 연구원 총 25명: 영어3, 아랍어2, 러시아어2, 독일어2,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2, 일본어, 베트남어2, 태국어2, 마인어2, 튀르키예어, 포르

			투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53백만원 ·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집 발간(약 1,000부) 등 홍보=12백만원 ·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1과제x30백만원=30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2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6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사업운영 2백만원 · 차세대 세계법제 이용자 간담회 1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69백만원) · 석사급 남북법제 전문연구원(1명) 51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과제x40백만원=40백만원 · 남북법제 주석서 연구 1과제x50백만원=5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x5백만원=15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x8백만원=8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5백만원
'29	'25~'29 (당초)	1,315	- 세계법제 지원사업(1,199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1년) 1,109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53백만원 ·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30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5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사업운영 1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16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1명) 46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과제x40백만원=4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x4.3백만원=13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x8백만원=8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4백만원
	'26~'30 (요구)	3,122	- 세계법제 지원사업(2,951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민간위탁사업비(1년) 2,816백만원 ※ 연구원 총 26명: 영어3, 아랍어2, 러시아어2, 독일어2,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2, 일본어2, 베트남어2, 태국어2, 마인어2, 튀르키예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53백만원 ·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집 발간(약 1,000부) 등 홍보=12백만원 ·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1과제x50백만원=50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2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6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사업운영 2백만원 · 차세대 세계법제 이용자 간담회 1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71백만원) · 석사급 남북법제 전문연구원(1명) 51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과제x40백만원=40백만원 · 남북법제 주석서 연구 1과제x50백만원=5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x5백만원=15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x9백만원=9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6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과제x40백만원=40백만원 · 남북법제 주석서 연구 1과제x50백만원=5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x4.3백만원=13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8백만원=8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4백만원
'30	'26~'30 (요구)	3,122	- 세계법제 지원사업(2,951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민간위탁사업비(1년) 2,816백만원 ※ 연구원 총 26명: 영어3, 아랍어2, 러시아어2, 독일어2,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2, 일본어2, 베트남어2, 태국어2, 마인어2, 튀르키예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53백만원 ·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집 발간(약 1,000부) 등 홍보=12백만원 ·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1과제×50백만원=50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2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6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사업운영 2백만원 · 차세대 세계법제 이용자 간담회 1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71백만원) · 석사급 남북법제 전문연구원(1명) 51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과제×40백만원=40백만원 · 남북법제 주석서 연구 1과제×50백만원=5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5백만원=15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9백만원=9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6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23~'2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3	1,116	-	-	1,116	1,085	-	31
'24	1,662	-	△7	1,655	1,611	-	44
'25	1,682	-	△1	1,681	1,641	-	40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외부기관	지적사항
국회 법사위 (‘23년 예산심의)	○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법령정보를 제공 수 있도록 하며, 법령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
국회 (‘24 국정감사)	○ 세계법제정보센터 외국법령정보 제공 및 전체 번역 대비 완역률 비중과 국내 법령의 영문화 완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국회 법사위 (‘25년 예산심의)	○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한 효율적인 수행체계 검토 필요

③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재량지출)

(담당자: 5급 우승기 044-200-6783, 6급 김소명 044-200-6792)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 없음
사업내용	어렵고 복잡한 법령 정보를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법령정보를 제공
사업기간	'09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5결산	'26예산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25~'29계획 (증가율)	1,330	1,474 (10.8)	1,306 (△11.3)	1,172 (△10.2)	1,199 (2.3)		(△2.6)
'26~'30요구 (증가율)		1,474	1,692 (14.8)	1,694 (0.0)	1,696 (0.0)	1,698 (0.0)	(3.6)

○ 세부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 개발 용역 비용 증액(증 154백만원)

◆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

-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한국생활 조기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수 생활 정보 제공에 대한 적극적 정책 마련 필요
-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 속 기본적인 법규범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법령정보를 시각화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필요
-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 제공 언어를 기존('25년) 4개 언어*에서 10개 언어**로 확대 및 콘텐츠 수 확대할 필요

* 국내 체류 외국인 10만명 이상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 현재 책자형 콘텐츠로 제공 중인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 '25년 하반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2,993명)의 87.7%가 '알기 쉬운 외국어 콘텐츠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생활법령정보 온라인 · 오프라인 홍보 비용 증액(증 53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온 · 오프라인 홍보 필요성 ◆

- 만족도 조사 등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법령정보 제공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형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쉽게 접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6*	'25~'29 (당초)	1,474	- 기타직 보수 등 1명x41백만원 = 41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1,406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 · 업데이트 (책임연구원)4명x4.56백만원x12월x1.3x1.1 = 313백만원 (일반연구원)21명x2.45백만원x12월x1.3x1.1 = 883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x2.04백만원x12월x1.3x1.1 = 7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감수 5백만원x28개 = 140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임차료 3백만원x2회 = 6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1.3백만원
	'26~'30 (요구)	1,474	- 기타직 보수 등 1명x41백만원 = 41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1,406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 · 업데이트

			(책임연구원)4명x4.56백만원x12월x1.3x1.1 = 313백만원 (일반연구원)21명x2.45백만원x12월x1.3x1.1 = 883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x2.04백만원x12월x1.3x1.1 = 7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감수 5백만원x28개 = 140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임차료 3백만원x2회 = 6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1.3백만원
'27	'25~'29 (당초)	1,306	- 기타직 보수 1명x29백만원= 29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1,241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 업데이트 25명x2.40백만원x12월x1.3x1.1 = 1,031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x2.04백만원x12월x1.3x1.1 = 7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x5백만원 = 140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임차료 3백만원x2회 = 6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30백만원
	'26~'30 (요구)	1,692	- 기타직 보수 등 1명x43백만원 = 43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1,560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 업데이트 (책임연구원)4명x4.56백만원x12월x1.3x1.1 = 313백만원 (일반연구원)21명x2.45백만원x12월x1.3x1.1 = 883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x2.04백만원x12월x1.3x1.1 = 7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감수 5백만원x28개 = 140백만원 ·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 개발 1백만원x10개 언어x14건x1.1 = 154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온·오프라인 홍보 53백만원 · 온라인 홍보: 2백만원x18회 = 36백만원 · 오프라인 홍보: 5.6백만원x3회 = 17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임차료 3백만원x2회 = 6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30백만원
'28	'25~'29 (당초)	1,172	- 기타직 보수 1명x29백만원= 29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1,107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 업데이트 25명x2.42백만원x12월x1.3x1.1 = 1,037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x2.04백만원x12월x1.3x1.1 = 70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임차료 3백만원x2회 = 6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30백만원
	'26~'30 (요구)	1,694	- 기타직 보수 등 1명x45백만원 = 45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1,560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 · 업데이트 (책임연구원)4명x4.56백만원x12월x1.3x1.1 = 313백만원 (일반연구원)21명x2.45백만원x12월x1.3x1.1 = 883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x2.04백만원x12월x1.3x1.1 = 7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감수 5백만원x28개 = 140백만원 ·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 개발 1백만원x10개 언어x14건x1.1 = 154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온 · 오프라인 홍보 53백만원 · 온라인 홍보: 2백만원x18회 = 36백만원 · 오프라인 홍보: 5.6백만원x3회 = 17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임차료 3백만원x2회 = 6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30백만원
'29	'25~'29 (당초)	1,199	- 기타직 보수 1명x29백만원= 29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1,134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 · 업데이트 25명x2.48백만원x12월x1.3x1.1 = 1,064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x2.04백만원x12월x1.3x1.1 = 70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임차료 3백만원x2회 = 6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30백만원
	'26~'30 (요구)	1,696	- 기타직 보수 등 1명x47백만원 = 4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1,560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 · 업데이트 (책임연구원)4명x4.56백만원x12월x1.3x1.1 = 313백만원 (일반연구원)21명x2.45백만원x12월x1.3x1.1 = 883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x2.04백만원x12월x1.3x1.1 = 7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감수 5백만원x28개 = 140백만원 ·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 개발 1백만원x10개 언어x14건x1.1 = 154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온 · 오프라인 홍보 53백만원 · 온라인 홍보: 2백만원x18회 = 36백만원 · 오프라인 홍보: 5.6백만원x3회 = 17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임차료 3백만원x2회 = 6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30백만원
'30	'26~'30 (요구)	1,698	- 기타직 보수 등 1명x49백만원 = 49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1,560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 · 업데이트 (책임연구원)4명x4.56백만원x12월x1.3x1.1 = 313백만원 (일반연구원)21명x2.45백만원x12월x1.3x1.1 =

			883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x2.04백만원x12월x1.3x1.1 = 7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감수 5백만원x28개 = 140백만원 ·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 개발 1백만원x10개 언어x14건x1.1 = 154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온·오프라인 홍보 53백만원 · 온라인 홍보: 2백만원x18회 = 36백만원 · 오프라인 홍보: 5.6백만원x3회 = 17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임차료 3백만원x2회 = 6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30백만원
--	--	--	---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23~'2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3	1,051	-	-	1,051	1,022	-	29
'24	1,328	-	-	1,328	1,288	-	40
'25	1,362	-	-	1,362	1,330	-	32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4년	국회 (‘23회계연도 결산)	생활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해 '25년에는 업데이트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개정 후 시행 전 법령 안내 관련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개정 후 콘텐츠에 반영되지 않은 법령 링크 안내 실시
2024년	국회 (‘25회계연도 예산)	생활정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생활조례 콘텐츠의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여 변경된 생활조례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해 '25년에는 업데이트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노력하겠음
2025년	국회 (‘24회계연도 결산)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과 개정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해 '26년부터는 이용자 수가 많은 일부 콘텐츠의 업데이트 주기를 15일로 단축하고,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준비를 통해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령정보가 적기에 업데이 트 되도록 노력하겠음
2025년	국회 (“24회계연도 결산)	생활법령정보 세미나에서 서비스 운영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 정하고 시스템 이용자의 의견 을 들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운영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콘텐츠 및 서비스 운영과 관 련된 실질적 사항을 중심으로 세미나 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겠음

④ 법령심사지원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5급 김혜진, 044-200-6599, 9급 한지훈, 044-200-6569)

(담당자: 5급 박예린, 044-200-6833, 6급 안상호, 044-200-6834)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 해당없음
사업내용	· 전시법령 인쇄, 법제업무편람 발간, 정부입법계획 수립, 국정과제 관련 입법지원 등 정부입법절차 전반 지원 · 법제업무평가 실시 등 환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법제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부처 친화적인 법제업무 환경 구축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 적극행정 법제 전파 ·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정부 정책이 입법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필요한 입법 기준을 마련 · 입법내용의 전문화, 다수 부처 관련 융·복합 법령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쟁점 법령안의 증대 등으로 각 부처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전문적 법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하는 법령안의 입안과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입안지원제도 운영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령심사지원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5결산 ¹⁾	'26예산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25~'29계획 (증가율)	288 -	296 (△4.8)	262 (△11.5)	235 (△10.3)	241 (2.6)	- -	- △6.2%
'26~'30요구 (증가율)	- -	296 (-)	306 (3.4)	314 (2.6)	323 (2.9)	331 (2.5)	- 2.8%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6*	'25~'29 (당초)	296	- 법령심사지원사업: 150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1인×38백만원 = 38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280건×0.057백만원 = 15.96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600부×0.018백만원 = 10.8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35백만원×2건 = 3.5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500부×0.01백만원 = 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0.3백만원×4인×2회 = 24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87백만원 = 34.4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등 임차료 2회×2백만원 = 4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22백만원×1식 = 22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 경비 12월×1.13백만원 = 13.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146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2인×49.233백만원 = 9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850부×0.0212백만원 = 18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0회×0.3백만원 = 9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88백만원 = 12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0.75백만원 = 9백만원
	'26~'30 (요구)	296	- 법령심사지원사업: 150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1인×38백만원 = 38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280건×0.057백만원 = 15.96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600부×0.018백만원 = 10.8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35백만원×2건 = 3.5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500부×0.01백만원 = 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0.3백만원×4인×2회 = 24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87백만원 = 34.4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등 임차료 2회×2백만원 = 4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22백만원×1식 = 22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 경비 12월×1.13백만원 = 13.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146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2인×49.233백만원 = 9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850부×0.0212백만원 = 18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0회×0.3백만원 = 9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88백만원 = 12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0.75백만원 = 9백만원
'27	'25~'29 (당초)	262	- 법령심사지원사업: 132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1인×38백만원 = 38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250건×0.052백만원 = 13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520부×0.018백만원 = 9.36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420부×0.0035백만원×2건 = 2.94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450부×0.01백만원 = 4.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0.3백만원×4인×2회 = 2.4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18백만원 = 26.16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등 임차료 2회×2백만원 = 4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22백만원×1식 = 22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 경비 12월×0.86백만원 = 10.32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130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2인×49.233백만원 = 9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500부×0.0212백만원 = 1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25회×0.3백만원 = 7.5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667백만원 = 8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0.5백만원 = 6백만원
	'26~'30 (요구)	306	- 법령심사지원사업: 155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1인×38.8백만원 = 38.8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280건×0.057백만원 = 15.96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600부×0.018백만원 = 10.8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35백만원×2건 = 3.5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1000부×0.01백만원 = 10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0.3백만원×4인×2회 = 2.4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87백만원 = 34.4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등 임차료 2회×2백만원 = 4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22백만원×1식 = 22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 경비 12월×1.13백만원 = 13.5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151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2인×50.710백만원 = 101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550부×0.035백만원 = 19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0회×0.3백만원 = 9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88백만원 = 12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0.83백만원 = 10백만원
'28	'25~'29 (당초)	235	- 법령심사지원사업: 120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1인×38백만원 = 38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200건×0.052백만원 = 10.4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400부×0.018백만원 = 7.2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300부×0.0035백만원×2건 = 2.1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400부×0.01백만원 = 4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0.3백만원×4인×2회 = 2.4백만원

'29	'26~'30 (요구)	314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1.8백만원 = 21.6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등 임차료 2회×1.8백만원 = 3.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22백만원×1식 = 22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 경비 12월×0.8백만원 = 9.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115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2인×49.233백만원 = 9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400부×0.0212백만원 = 8.5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15회×0.3백만원 = 4.5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167백만원 = 2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0.167백만원 = 2백만원
			- 법령심사지원사업: 158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1인×39.6백만원 = 39.6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300건×0.057백만원 = 17.1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600부×0.018백만원 = 10.8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35백만원×2건 = 3.5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1000부×0.01백만원 = 10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0.3백만원×4인×2회 = 24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87백만원 = 34.4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등 임차료 2회×2.5백만원 = 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22백만원×1식 = 22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 경비 12월×1.13백만원 = 13.5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156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2인×52.231백만원 = 104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550부×0.036백만원 = 20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0회×0.3백만원 = 9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88백만원 = 12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0.9백만원 = 11백만원
	'25~'29 (당초)	241	- 법령심사지원사업: 123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1인×38백만원 = 38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200건×0.052백만원 = 10.4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400부×0.018백만원 = 7.2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300부×0.0035백만원×2건 = 2.1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400부×0.01백만원 = 4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0.3백만원×4인×2회 = 24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백만원 = 24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등 임차료 2회×1.8백만원 = 3.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22백만원×1식 = 22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 경비 12월×0.8백만원 = 9.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118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2인×49.233백만원 = 9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425부×0.0212백만원 = 9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17회×0.3백만원 = 5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25백만원 = 3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0.25백만원 = 3백만원
	'26~'30 (요구)	323	- 법령심사지원사업: 162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1인×41백만원 = 41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300건×0.057백만원 = 17.1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600부×0.018백만원 = 10.8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35백만원×2건 = 3.5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1200부×0.01백만원 = 12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0.3백만원×4인×2회 = 2.4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87백만원 = 34.4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등 임차료 2회×2.5백만원 = 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22백만원×1식 = 22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 경비 12월×1.13백만원 = 13.5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161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2인×53.798백만원 = 10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850부×0.037백만원 = 20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0회×0.3백만원 = 9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88백만원 = 12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1백만원 = 12백만원
'30	'26~'30 (요구)	331	- 법령심사지원사업: 165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1인×42백만원 = 42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300건×0.057백만원 = 17.1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600부×0.02백만원 = 12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35백만원×2건 = 3.5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1200부×0.01백만원 = 12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0.3백만원×4인×2회 = 2.4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3백만원 = 36백만원 ·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등 임차료 2회×2.5백만원 = 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22백만원×1식 = 22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 경비 12월×1.13백만원 = 13.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166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2인×55.412백만원 = 111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550부×0.038백만원 = 2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0회×0.3백만원 = 9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88백만원 = 12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1.1백만원 = 13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23~'2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3	381	-	-	381	354	-	27
'24	335	-	△28	307	286	-	20
'25	311	-	△16	295	288	-	7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3년	국회 (‘22회계연도 결산)	정부입법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정부입법계획의 이행을 제고를 위하여 정부입법계획 수립 시 소관 부처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법제업무평가에서 입법계획 철회 시 적용되는 감점 가중치를 확대하였음.
2024년	국회 (‘23회계연도 결산)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과정의 검토를 강화하고 준수율과 유연성을 균형있게 관리할 것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5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 및 25년도 법제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반영하였음.
2025년	국회 (‘24회계연도 결산)	법령입법자문의 편중 지양 필요	‘25년 분기별 전문가 자문료 집행 실적은 1분기 3건, 2분기 3건, 3분기 3건, 4분기 3건으로, 전체 예산의 약 41%를 상반기에 집행하였고, ‘25년에는 전문분야에 맞춰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분야를 최대한 고려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음.
		입법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입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안의 입안부터 입법예고, 심사·공포까지 입법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입법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법령안에 대해 원스톱 입법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입법지원이 입법예고 등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반영 내용: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사항 없음
- 지자체 매칭 신규사업에 대한 지자체 의견: 해당사항 없음

⑤ 법제정비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5급 권대훈, 044-200-6576, 6급 박선영, 044-200-6575)

(담당자: 4급 오정애, 044-200-6741, 7급 문지현, 044-200-6737)

(담당자: 5급 이소현, 044-200-6778, 6급 김민정, 044-200-6758)

(담당자: 5급 이형훈, 044-200-6855, 8급 유미진 044-200-6772)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 [국정과제 61-3]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 [국정과제 52-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법규 체계 마련을 지원하여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 [국정과제 95-3] 육아·돌봄 국가보장으로 일·가정 양립 실현 · [국정과제 97-3]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내용	○법령정비 ·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 · 국민 의견에 기반한 법령정비를 통하여 법제업무의 민주성과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입법제도 효율적 운영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법제 혁신 도모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 지방정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령-조례-규칙 간 위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품질 향상 지원 · 지방정부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 및 정비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알기 쉬운 법제 구축 ·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문장, 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법령용어의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 실시 ·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각 부처의 정비를 지원 ·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는 법령안 및 조례안을 검토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¹⁾	해당없음
사업규모 ²⁾	해당없음

지원조건 ³⁾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제정비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5결산 ¹⁾	'26예산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25~'29계획 (증가율)	1,115	1,145 (2.7)	1,015 (△11.4)	910 (△10.3)	932 (2.4)		△4.4%
'26~'30요구 (증가율)		1,145 (2.7)	1,555 (35.8)	1,579 (1.5)	1,604 (1.6)	1,628 (1.5)	9.2%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26*	'25~'29 (당초) 1,145	- 법령정비사업 394백만원 · 법령정비사업 계약직 3명 × 45.3백만원=136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53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1,000부) 13백만원 · 현장간담회 회의 운영 3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운영 22백만원 · 연구용역 1건 × 48백만원=48백만원 · 미래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법제 혁신 공청회 등 75백만원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제 혁신 연구용역 44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332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책자 발간 2회 × 17백만원=34백만원 · 자치법제관련 회의 개최 = 68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19회 × 0.3백만원=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5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37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28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419백만원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7백만원=282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57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10,000원×2,300부=23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50백만원

	'26~'30 (요구)	1,145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3.5백만원=7백만원 - 법령정비사업 394백만원 · 법령정비사업 계약직 3명 × 45.3백만원=136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53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1,000부) 13백만원 · 현장간담회 회의 운영 3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운영 22백만원 · 연구용역 1건 × 48백만원=48백만원 · 미래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법제 혁신 공청회 등 75백만원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제 혁신 연구용역 44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332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책자 발간 2회 × 17백만원=34백만원 · 자치법제관련 회의 개최 = 68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19회 × 0.3백만원=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5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37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28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419백만원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7백만원=282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57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10,000원×2,300부=23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5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3.5백만원=7백만원
'27	'25~'29 (당초)	1,015	- 법령정비사업 316백만원 · 법령정비사업 계약직 3명 × 45.3백만원=136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53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800부) 10백만원 · 현장간담회 회의 운영 3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운영 22백만원 · 연구용역 1건 × 48백만원=48백만원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제 혁신 연구용역 44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31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책자 발간 2회 × 17백만원=34백만원 · 자치법제관련 회의 개최 = 68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19회 × 0.3백만원=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28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37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28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389백만원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7백만원=282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31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10,000원×2,000부=20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5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3백만원=6백만원

	'26~'30 (요구)	1,555	- 법령정비사업 794백만원 · 법령정비사업 계약직 3명 × 47백만원=141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53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1,000부) 13백만원 · 현장간담회 회의 운영 3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운영 28백만원 · 연구용역 1건 × 48백만원=48백만원 · 미래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법제 혁신 공청회 등 75백만원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제 혁신 연구용역 44백만원 · 행정규칙 사전검토 체계 강화 인력 인건비 1명 × 44백만원 · 행정규칙 전수 정비 추진 연구용역 180백만원 · 행정규칙 제도 개선 위한 연구용역 150백만원 · 행정규칙 제도 개선 위한 단기 해외연수 1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334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책자 발간 2회 × 17백만원=34백만원 · 자치법제관련 회의 개최 = 68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19회 × 0.3백만원=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5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39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28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427백만원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8.4백만원=290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57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10,000원×2,300부=23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5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3.5백만원=7백만원
'28	'25~'29 (당초)	910	- 법령정비사업 263백만원 · 법령정비사업 계약직 3명 × 45.3백만원=136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800부) 10백만원 · 현장간담회 회의 운영 3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운영 22백만원 · 연구용역 1건 × 48백만원=48백만원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제 혁신 연구용역 44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28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책자 발간 2회 × 17백만원=34백만원 · 자치법제관련 회의 개최 = 68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19회 × 0.3백만원=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98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37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28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367백만원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7백만원=282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10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10,000원×1,900부=19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5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3백만원=6백만원

	'26~'30 (요구)	1,579	- 법령정비사업 807백만원 · 법령정비사업 계약직 3명 × 48.4백만원=145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53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1,000부) 13백만원 · 현장간담회 회의 운영 9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운영 30백만원 · 연구용역 1건 × 48백만원=48백만원 · 미래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법제 혁신 공청회 등 75백만원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제 혁신 연구용역 44백만원 · 행정규칙 사전검토 체계 강화 인력 인건비 1명 × 45백만원 · 행정규칙 전수 정비 추진 연구용역 180백만원 · 행정규칙 제도 개선 위한 연구용역 150백만원 · 행정규칙 제도 개선 위한 단기 해외연수 1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33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책자 발간 2회 × 17백만원=34백만원 · 자치법제관련 회의 개최 = 68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19회 × 0.3백만원=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5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41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28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436백만원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9.8백만원=299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57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10,000원×2,300부=23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5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3.5백만원=7백만원
'29	'25~'29 (당초)	932	- 법령정비사업 263백만원 · 법령정비사업 계약직 3명 × 45.3백만원=136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800부) 10백만원 · 현장간담회 회의 운영 3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운영 22백만원 · 연구용역 1건 × 48백만원=48백만원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제 혁신 연구용역 44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29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책자 발간 2회 × 17백만원=34백만원 · 자치법제관련 회의 개최 = 68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19회 × 0.3백만원=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08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37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28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379백만원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7백만원=282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20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10,000원×2,000부=20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5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3.5백만원=7백만원
	'26~'30 (요구)	1,604	- 법령정비사업 821백만원 · 법령정비사업 계약직 3명 × 50백만원=150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1,000부) 13백만원 · 현장간담회 회의 운영 9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운영 30백만원 · 연구용역 1건 × 48백만원=48백만원 · 미래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법제 혁신 공청회 등 75백만원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제 혁신 연구용역 44백만원 · 행정규칙 사전검토 체계 강화 인력 인건비 1명 × 46백만원 · 행정규칙 전수 정비 추진 연구용역 180백만원 · 행정규칙 제도 개선 위한 연구용역 150백만원 · 행정규칙 제도 개선 위한 단기 해외연수 1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338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책자 발간 2회 × 17백만원=34백만원 · 자치법제관련 회의 개최 = 68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19회 × 0.3백만원=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5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43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28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445백만원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51.2백만원=308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57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10,000원×2,300부=23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5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3.5백만원=7백만원
'30	'26~'30 (요구)	1,628	- 법령정비사업 835백만원 · 법령정비사업 계약직 3명 × 51.5백만원=155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1,500부) 21백만원 · 현장간담회 회의 운영 9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운영 30백만원 · 연구용역 1건 × 48백만원=48백만원 · 미래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법제 혁신 공청회 등 75백만원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제 혁신 연구용역 44백만원 · 행정규칙 사전검토 체계 강화 인력 인건비 1명 × 47백만원 · 행정규칙 전수 정비 추진 연구용역 180백만원 · 행정규칙 제도 개선 위한 연구용역 150백만원 · 행정규칙 제도 개선 위한 단기 해외연수 1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34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책자 발간 2회 × 17백만원=34백만원 · 자치법제관련 회의 개최 = 68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19회 × 0.3백만원=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5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45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28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453백만원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52.7백만원=316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57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10,000원×2,300부=23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5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3.5백만원=7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23~'2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3	1,307	-	△9	1,298	1,211	-	87
'24	1,324	-	△41	1,283	1,236	-	47
'25	1,184	-	△50	1,134	1,115	-	19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2년	국회 (‘21 회계연도 결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입법 컨설팅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법제처는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쓰기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 (알기쉬운 법제구축)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수행 시 긴급 검토요청 안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례안은 모두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거치도록 개선하였음 현행법령 등으로의 의견수렴 범위 확대, 국민참여단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확립 및 맞춤형 교육 제공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편방안 마련
2024년	국회 (‘23 회계연도 결산)	국민법제관 활동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목적의 다른 제도들과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 (법령정비)	국민법제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의견 제출을 독려하는 등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개선에 한계가 있어 사업 폐지를 결정하고, '25년 예산에 미편성함
2025년	국회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는	'25년부터 정비를 제고를 위해 소관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4 회계연도 결산)	연구용역으로 발굴한 문장 정비안 중 최종 정비안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낮고, 실제 개정 완료된 실적이 미흡하므로 사업의 실효성 및 필요성 확보가 필요함 (알기쉬운 법제구축)	부처 및 법제처 심사 부서에 문장정비 과제 반영을 요청하는 ‘부처협의안 검토 제도’ 도입하였고, 법제업무평가지표에 문장정비 실적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음. 또한, 경미한 정비 사항의 경우에는 정비 필요성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되, 문장정비 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 등 문장정비 사업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함.

⑥ 행정법제 혁신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4급 오정애, 044-200-6741. 7급 문지현, 044-200-6737)

(담당자: 5급 이다은, 044-200-6565. 7급 최혜원, 044-200-6566)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
사업내용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개별 법령·제도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입법 전반의 법령 개선과제 발굴, 입법영향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법제 개선 및 규제 개혁에 노력
사업기간	'20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행정법제 혁신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5결산	'26예산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25~'29계획 (증가율)	486	303 (△37.7)	268 (△11.6)	241 (△10.1)	247 (2.5)		(△15.6)
'26~'30요구 (증가율)		303	1,076 (255.1)	1,076 -	1,076 -	1,076 -	(37.3)

□ 산출근거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6*	'25~'29(당초)	303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등: 76백만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49백만원 ·기타 경비 등: 27백만원 -입법영향분석 실시 : 227백만원
	'26~'30(요구)	386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등: 76백만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49백만원 ·기타 경비 등: 27백만원 -입법영향분석 실시 : 227백만원
'27	'25~'29(당초)	268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등: 63백만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36백만원 ·기타 경비 등: 27백만원 -입법영향분석 실시 : 205백만원
	'26~'30(요구)	1,076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등: 76백만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49백만원 ·기타 경비 등: 27백만원 -입법영향분석 실시 : 1,000백만원
'28	'25~'29(당초)	241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등: 41백만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31백만원 ·기타 경비 등: 10백만원 -입법영향분석 실시 : 200백만원
	'26~'30(요구)	1,076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등: 76백만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49백만원 ·기타 경비 등: 27백만원 -입법영향분석 실시 : 1,000백만원
'29	'25~'29(당초)	247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등: 47백만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37백만원 ·기타 경비 등: 10백만원 -입법영향분석 실시 : 200백만원
	'26~'30(요구)	1,076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등: 76백만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49백만원 ·기타 경비 등: 27백만원 -입법영향분석 실시 : 1,000백만원
'30	'26~'30(요구)	1,076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등: 76백만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49백만원 ·기타 경비 등: 27백만원 -입법영향분석 실시 : 1,000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22~'24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3	730	-	-	730	684	-	46
'24	747	-	±16	747	669	-	78
'25	486	-	-	447	446	-	1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3년	국회 (‘23 국정감사)	만 나이 기준 전환을 위한 홍보 를 강화할 것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실시 등 홍보 추진
2024년	국회 (‘23 회계연도 결산)	행정기본법상의 권리구제 제도가 개별법보다 약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이의신청 제도 이용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2025년	국회 (‘24 회계연도 결산)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통한 개선 과제 도출 및 사후 관리를 강화 하여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높일 것	신속하게 수용과제가 정비까지 이어 질 수 있도록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 여 정비·제도개선 현황을 파악하고, 입안지원 및 입법절차 지원을 실시 하겠음

⑦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재량지출)

(담당자: 5급 우승기 044-200-6783, 6급 김소명 044-200-6792)

(담당자: 4급 하선우 044-200-6784, 7급 노은영 044-200-6791)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6-1」 국민 참여와 인권 중심의 사법 제도 개선 및 사법개혁 추진기구 설치 「24-1」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사업내용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구축·서비스하여 법령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후 인프라의 선제적 교체와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AP) 이관을 추진함으로써, 대국민 법령정보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 - 법령안 입안·심사, 법령해석, 자치입법 및 의원입법을 지원하는 정부 입법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행정기관의 법제업무와 국민의 입법 참여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 - 어렵고 복잡한 법령 정보를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법령정보를 제공 - 법제처 누리집 및 법제포털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외부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수렴·반영을 통한 효율적인 법제업무 지원과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 활동 강화 및 개인정보 등 내부 정보 자원 보호 -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 및 재해·재난 등의 장애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정보시스템 보호 활동으로 안전성 및 보안 수준을 확보하고,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테러·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정보시스템 보안성 강화
사업기간	‘01년 ~계속
총사업비 ¹⁾	해당없음
사업규모 ²⁾	해당없음
지원조건 ³⁾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사업 지출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5결산 ¹⁾	'26예산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25~'29계획 (증가율)	7,799	20,517 (163.1)	18,180 (△11.4)	16,310 (△10.3)	16,694 (2.4)		(21.0)
'26~'30요구 (증가율)		20,771	27,795 (33.8)	18,359 (△33.9)	12,598 (△31.4)	12,148 (△3.6)	(△12.5)

1) '25년도 결산금액은 필요시 가결산 또는 추정치로 작성

•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2차) 구축 추진(증 3,741백만원)

◇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2차년도 구축의 필요성 ◇

□ [국정과제 24-1]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공공부문 전반에 AI를 내재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하려는 것으로, **30대 핵심과제 내 법제처 AI 법령검색 서비스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사용자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고, 관련 종합법령정보(법령, 판례 등)를 보여주기 위한 2차 사업 추진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현행화(RAG)·검증 등의 AI 에이전트들을 추가 개발하고,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테스트 기관 피드백에 따른 조정으로 성능 최적화
- 최적의 추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언어모델을 병렬적으로 구동하고, 법령특화 AI 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언어모델 추가 도입 및 학습
- 기관 공동활용을 위해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의 A2A 표준화 프로토콜(데이터 스키마, 응답 표준 등)을 마련하여 범정부 AI 생태계에 기여
- 대국민 서비스 개시('27년 2분기) 이전 부적절한 질문에 의한 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모의 훈련을 통해 AI 가드레일(안전장치) 고도화
- 사용자의 관심사와 이용 패턴을 학습하여 개인별로 최적화된 법령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음성 서비스 등 기능 확대
-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및 개인 맞춤형 기능을 고려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앱의 신규 UI를 구성하고, 모바일 앱 고도화(iOS/Android)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후 장비 교체 및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한 AP 이관 (중 909백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후 장비 교체 및 보안 취약점 개선 필요성 ◆

- “언제나 안전이나 보안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맞다. 돈이 든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만 하지 않는 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VIP 말씀, '25.9.28. 중대본 회의)

- 국가법령정보센터(1등급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내구연한(6년)에서 4년 초과한 노후 서버* 장비**를 조속히 교체함으로써, **중단 없는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필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버 총 79식 중 내구연한이 지난 28식(10년차, 2017년 도입) 교체

- 법령정보 **현행화 편집기***에 사용 중인 ActiveX(한글 OCX)는 제작사의 기술 지원 종료 및 보안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어, **법령정보의 무결성과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안 취약 요소 제거 필요

*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된 공포문으로 현행법령 자동편집, 타법개정문 추출, 조문 시행일 생성, 조문형식 검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편집 프로그램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콘텐츠 위탁 관리 비용 증액(중 113백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콘텐츠 유지관리의 필요성 ◆

- 「디지털포용법」에 의거,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에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별표·별지서식을 포함한 **모든 법령정보에 대한 전자점자 콘텐츠 제공 필요**

「디지털포용법」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웹사이트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178백만원, '25.3월)를 도입해 법령정보를 자동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수작업이 불가피한 별표·별지서식*에 대한 **지속적인 점자 변환 확대 및 현행화가 필요**

* '25년 점자SW 제공업체에서 무상으로 약 8,000건(7개월 소요)의 장애인 관련 별표·별지서식을 선별해 변환·제공했으나, 법령 제·개정에 따른 **현행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전자점자 변환은 **일회성** 작업에 그치지 않고, 별표·별지서식의 개정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실시간으로 반영 필요**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비용 증액(증 6,755백만원)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 법제업무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해 국내·외 법제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법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 마련 필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법령심사·해석·정비 등 법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고도화된 분석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법제 빅데이터를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및 유사도 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법제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별도 분석·지원 체계 구축 필요
 - (법제 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다양한 형식의 법제 데이터를 구조화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셋 구축
 - (AI·빅데이터 기술 인프라 구축) 법제 업무 관련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수집·저장·분석 인프라 구축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2년차) 비용 증액(증 5,095백만원)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의 법제업무 처리와 일반국민의 입법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입법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 * 정부입법지원센터(업무용), 국민참여입법센터(대국민용), 법령안편집기
- 시스템 노후화('07년 구축)로 체계적 개선 및 최신 기술 반영이 어렵고, 시스템 구조가 복잡하여 장애에 취약, 안정적인 운영 한계
- 특히, 법령안편집기의 경우 ActiveX지원 종료에 따른 운영 중단 시 수작업을 통한 문서 작성 등 전부처 법제업무 추진 시 불편·비효율 초래
- 이에, 정부입법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24년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이를 근거로 현행 정부입법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26년~'27년) 추진 중
 - * 구축 대상 현행 시스템의 규모를 고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2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

-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2차) 증액(증 1,000백만원)

◆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2차)의 필요성 ◆

- 어려운 법령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공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 노후화 된 시스템 개선 및 AI 신기술 반영을 위한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음
- ISP결과에 따라 단순 키워드 검색에 그치고 있는 검색 서비스를 이용자 편의 제고 및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AI 기반 대화형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 제공을 위하여 AI를 활용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제작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

- 내부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AI 서비스 제공(증 72백만원)

◆ 내부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AI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통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진
 -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은 행안부 공공AI 사업의 일환으로서, 행정업무에 민간의 AI 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웹 기반의 업무환경 제공 서비스
 - * 행정망에서 외부의 민간 AI 기술 사용 가능
 - 시간장소 제약없이 웹에서 소통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AI를 중심으로 업무 관련 기능(메일, 메신저, 영상회의, 웹오피스, 메신저 등)을 연계·활용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

-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AP 이관(증 99백만원)

◆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AP 이관의 필요성 ◆

- 법제처 대표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구연한(7년)이 도래한 노후 서버 장비 교체 필요
 - 홈페이지 노후 서버 장비* 교체 및 신규 서버 장비로의 SW 이관 필요
 - * 홈페이지 서버 내구연한 도과한 9식(2018년 도입) 교체 예정
- 홈페이지 서버 교체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유지보수 사업의 일부로 반드시 필요
 - 서버 교체를 통해 법제처 대표 홈페이지의 신속한 처리 속도 및 안정성 확보 필요

-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운영지원 사업 증액(증 83백만원)

- 2026년 SW 기술자 평균임금 공표(IT지원기술자)에 따른 보수 책정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 소요 증가

* 2025년 5,058천원/月 → 2026년 5,170천원/月

- 세계법제정보센터 개편 및 고도화를 위한 비용 증액(증 2,500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전면 개편 및 고도화의 필요성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우리 국민·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법령정보 플랫폼으로서,
 - K-산업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해외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 * 세계법제정보센터 연간 방문자 수
(21) 82만 → (22) 144만 → (23) 183만 → (24) 219만 → (25) 361만
 - '06년 구축된 이후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각종 사용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 * ① 게시판 방식(등록일순 노출)은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짐
 - ② PDF 문서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복사·편집 등 정보 활용이 어려움
 - ③ 자연어 검색이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확한 명칭과 용어를 모르면 검색이 어려움
 - '26년 ISP 수립을 거쳐 AI 탐색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고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UI/UX를 고도화할 계획이며,
 - 대통령 지시 사항('25. 12. 12. 법제처 업무보고)인 'AI 기반 해외법령 검색' 기능을 신속히 구현하여 수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전면 개편 시점을 '27년으로 앞당겨 추진할 예정임
- 한편, '25년 과기부 주관 '공공 AX프로젝트'의 신규 과제로 'K-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AI 혁신'이 선정됨에 따라,
 - ①AI 법령 번역, ②해외법령 개정 사항 탐색·알림, ③지능형 검색 솔루션을 개발하여 '26년 12월 현행 세계법제정보센터에 이식할 예정인바,
 - 향후 ISP 수립을 거쳐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면, 기존 시스템에 이식된 AI 솔루션을 차세대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이관하고, AI 서비스 운영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추가 확충하기 위한 증액이 필수적임
- 또한, 대통령 지시 사항('25. 12. 12. 법제처 업무보고)인 'AI 기반 해외 법령 검색'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에서 해외법령 원문을 대대적으로 수집하여 한글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외법령 원문 검색 시스템' 신규 도입을 추진 중이며,
 -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해외법령 원문 검색 시스템'의 단계적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6*	'25~'29 (당초)	20,517 ○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7,305백만원 - 생성형 AI 법령정보 대국민 서비스 구축 3,344백만원 × 1건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레이어 고도화 251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관리 및 업데이트 위탁 1,982백만원 × 1건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723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개 ○ 정부입법지원 8,898백만원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7,187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711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967백만원 -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1,555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412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579백만원 - 유지·보수 459백만원 × 1건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120백만원 × 1건 ○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운영 774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8.5백만원 × 10건 - 사무용 SW 등 구입 72백만원 × 1식 - 노후 정보보호 시스템 교체 및 이중화 390백만원 × 1식 -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장비 유지·보수 227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376백만원 - ISP 수립 241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5백만원 × 1건 ○ 법제교육시스템 436백만원 - 보안·기능 개발 396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40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181백만원 - 상용임금 33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5백만원 × 3명 - 고용부담금 6.7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3백만원 × 6건 - 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2.5백만원 × 2건 - 정보화관련 서적 0.03백만원 × 4건 - 정보보안 교육 등 강사비 0.35백만원 × 3건 - 실명확인 서비스, 보안인증서 갱신 등 사용료 13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4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4백만원 × 1건
	'26~'30 (요구)	20,771 ○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7,559백만원 - 생성형 AI 법령정보 대국민 서비스 구축 3,344백만원 × 1건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레이어 고도화 505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관리 및 업데이트 위탁 1,982백만원 × 1건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723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개 ○ 정부입법지원 8,898백만원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7,187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711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967백만원 -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1,555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412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579백만원 - 유지·보수 459백만원 × 1건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120백만원 × 1건 ○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운영 774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8.5백만원 × 10건 - 사무용 SW 등 구입 72백만원 × 1식 - 노후 정보보호 시스템 교체 및 이중화 390백만원 × 1식 -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장비 유지·보수 227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376백만원 - ISP 수립 241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5백만원 × 1건 ○ 법제교육시스템 436백만원 - 보안·기능 개발 396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40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182백만원 - 상용임금 33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5백만원 × 3명 - 고용부담금 6.7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3백만원 × 6건 - 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2.5백만원 × 2건 - 정보화관련 서적 0.03백만원 × 4건 - 정보보안 교육 등 강사비 0.35백만원 × 3건 - 실명확인 서비스, 보안인증서 갱신 등 사용료 13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4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4백만원 × 1건
'27	'25~'29 (당초)	18,180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8,450백만원 - 생성형 AI 법령정보 대국민 서비스 구축 2,651백만원 × 1건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089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982백만원 × 1건 - 시스템 유지·보수 1,723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개 ○ 정부입법지원 6,995백만원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5,095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900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180백만원 - 시스템 개발 1,000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80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640백만원 - 유지·보수 520백만원 × 1건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120백만원 × 1건 ○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운영 481백만원 - 사무용 SW 등 구입 86백만원 × 1식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8.5백만원 × 10건 -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운영 지원 사업 310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70백만원 - 유지·보수 170백만원 × 1건 ○ 법제교육시스템 80백만원 - 유지·보수 80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184백만원 - 상용임금 30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5백만원 × 3명 - 고용부담금 6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6건 - 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4백만원 × 4건 - 정보화관련 서적 0.025백만원 × 4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27백만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보안인증서 갱신 등 사용료 13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8,473백만원 -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2,651백만원 × 1건 - 민간클라우드 이용료 1,090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2,095백만원 × 1건 - 시스템 유지·보수 1,723백만원 × 1건 - 노후 장비 AP 이관 507백만원 × 1건 - 보안 취약점(ActiveX) 제거 402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개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6,755백만원 - 법제 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5,439백만원 × 1건 - AI·빅데이터 기술 인프라 구축 1,316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6,986백만원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5,095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891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155백만원 -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2차) 1,000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55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789백만원 - 유지·보수 498백만원 × 1건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120백만원 × 1건 - AP 이관 99백만원 × 1건 -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72백만원 × 1건 ○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운영 467백만원 - 사무용 SW 등 구입 72백만원 × 1식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8.5백만원 × 10건 -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운영 지원 사업 310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2,663백만원 - 시스템 개발 2,500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63백만원 × 1건 ○ 법제교육시스템 61백만원 - 유지·보수 61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191백만원 - 상용임금 34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5백만원 × 3명 - 고용부담금 7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3백만원 × 6건 - 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2.5백만원 × 2건 - 정보화관련 서적 0.03백만원 × 4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5백만원 × 3건 - 실명확인 서비스 13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4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4백만원 × 1건

'26~'30
(요구)

27,795

			- 기타 비용 6백만원 × 1건 ○ 알기쉬운 법제구축 255백만원 -알기 쉬운 법령문장 자동생성 프로그램 구축 일반연구비 255백만원×1식=255백만원
'28	'25~'29 (당초)	16,310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7,065백만원 - 생성형 AI 언어모델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956백만원 × 1건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889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2,481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개 - 시스템 유지·보수 1,734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5,624백만원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4,304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20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497백만원 - 유지·보수 497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670백만원 - 유지·보수 520백만원 × 1건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120백만원 × 1건 ○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운영 515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9백만원 × 10건 - 사무용 SW 등 구입 85백만원 × 1식 -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운영 지원 사업 340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650백만원 - 시스템 개발 1,500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50백만원 × 1건 ○ 법제교육시스템 84백만원 - 유지·보수 84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05백만원 - 상용임금 35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5백만원 × 3명 - 고용부담금 7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6건 - 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4백만원 × 4건 - 정보화관련 서적 0.025백만원 × 4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27백만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보안인증서 갱신 등 사용료 13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6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8백만원 × 1건
	'26~'30 (요구)	18,359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6,527백만원 -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914백만원 × 1건 - 민간클라우드 이용료 1,190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2,195백만원 × 1건 - 시스템 유지·보수 2,223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개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1,564만원 - AI·빅데이터 기술 인프라 구축 624백만원 × 1건 - 법제 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940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5,624백만원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4,304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20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255백만원 - 유지·보수 255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712백만원 - 유지·보수 520백만원 × 1건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120백만원 × 1건 -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72백만원 × 1건 ○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운영 502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8.7백만원 × 10건 - 사무용 SW 등 구입 75백만원 × 1식 -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운영 지원 사업 340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190만원 - 시스템 개발 및 확장 1,000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90백만원 × 1건 ○ 법제교육시스템 90백만원 - 유지·보수 90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195백만원 - 상용임금 35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5백만원 × 3명 - 고용부담금 7.3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3백만원 × 6건 - 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2.5백만원 × 2건 - 정보화관련 서적 0.03백만원 × 4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5백만원 × 3건 - 실명확인 서비스 13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4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4백만원 × 1건 - 기타 비용 6백만원 × 1건 ○ 알기쉬운 법제구축 1,700백만원 -알기 쉬운 법령문장 자동생성 프로그램 개발구축 1,700백만원
'29	'25~'29 (당초)	16,694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11,306백만원 -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및 인프라 확대 3,559백만원 × 1건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100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2,719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개 - 시스템 유지·보수 2,923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2,010백만원 - 유지·보수 2,010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891백만원 - 유지·보수 891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1,060백만원 - 유지·보수 800백만원 × 1건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160백만원 × 1건 -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100백만원 × 1건 ○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운영 700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10백만원 × 10건 - 사무용 SW 등 구입 90백만원 × 1식 -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 110만원 × 1식 -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운영 지원 사업 400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320백만원 - 유지·보수 320백만원 × 1건 ○ 법제교육시스템 160백만원 - 유지·보수 160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47백만원

			- 상용임금 40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5백만원 × 3명 - 고용부담금 8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5백만원 × 6건 - 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5백만원 × 6건 - 정보화관련 서적 0.05백만원 × 6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6백만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보안인증서 갱신 등 사용료 17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7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30백만원 × 1건
	'26~'30 (요구)	12,598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6,299백만원 - 민간클라우드 이용료 1,190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2,481백만원 × 1건 - 시스템 유지·보수 2,623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개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1,013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 1,013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1,228백만원 - 유지·보수 1,228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255백만원 - 유지·보수 255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742백만원 - 유지·보수 550백만원 × 1건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120백만원 × 1건 -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72백만원 × 1건 ○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운영 522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8.7백만원 × 10건 - 사무용 SW 등 구입 75백만원 × 1식 -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운영 지원 사업 360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220백만원 - 시스템 개발 및 확장 1,000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220백만원 × 1건 ○ 법제교육시스템 120백만원 - 유지·보수 120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199백만원 - 상용임금 36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5백만원 × 3명 - 고용부담금 7.6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3백만원 × 6건 - 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2.5백만원 × 2건 - 정보화관련 서적 0.03백만원 × 4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5백만원 × 3건 - 실명확인 서비스 13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4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4백만원 × 1건 - 기타 비용 6백만원 × 1건 ○ 알기쉬운 법제구축 1,000백만원 -알기 쉬운 법령문장 자동생성 프로그램 고도화 1,000백만원
'30	'26~'30 (요구)	12,148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6,299백만원 - 민간클라우드 이용료 1,190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2,481백만원 × 1건 - 시스템 유지·보수 2,623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개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1,013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 1,013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1,659백만원 - 유지·보수 1,659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255백만원 - 유지·보수 255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772백만원 - 유지·보수 580백만원 × 1건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120백만원 × 1건 -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72백만원 × 1건 ○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운영 547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9백만원 × 10건 - 사무용 SW 등 구입 77백만원 × 1식 -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운영 지원 사업 380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250백만원 - 유지·보수 250백만원 × 1건 ○ 법제교육시스템 150백만원 - 유지·보수 150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03백만원 - 상용임금 37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5백만원 × 3명 - 고용부담금 7.9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3백만원 × 6건 - 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2.5백만원 × 2건 - 정보화관련 서적 0.03백만원 × 4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5백만원 × 3건 - 실명확인 서비스 13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4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4백만원 × 1건 - 기타 비용 6백만원 × 1건 ○ 알기쉬운 법제구축 1,000백만원 -알기 쉬운 법령문장 자동생성 프로그램 고도화 1,000백만원
--	--	--	---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23~'2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3	8,871	-	-	8,871	8,687	-	184
'24	8,744	-	△3	8,741	8,436	-	305
'25	8,046	-	-	8,046	7,799	-	247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5	국회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과정에서 정부	이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타 기관으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6회계연도 예산)	입법 통합플랫폼 구축 이후의 개인 정보 관리방안도 점검하는 등 신규 편성된 개인정보 컨설팅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	로부터 효과적인 예산 운용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 확보
	국회 (26회계연도 예산)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개발 초기부터 클라우드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 개발 초기부터 GPU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법령정보 임베딩, 학습 등에 사용할 예정임
	국회 (26회계연도 예산, '24회계연도 결산)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환각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수립 필요	이를 고려하여 ISP를 수립하였으며,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구축('26~'28) 과정에서 AI 환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특화 모델과 정확성 제고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임
	국회 (26회계연도 예산)	시각장애인의 불편요소 제거를 위한 화면구성 개편 및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화면 표출 등 시스템 개편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26년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아웃(화면 UI/UX) 개선을 위한 예산 548백만원이 반영되어, 디지털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화면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음
2024	국회 (25회계연도 예산)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질과 신뢰성 담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의 내실화 필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질과 신뢰성 담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ISP를 추진하였음
2024	국회 (25회계연도 예산)	법제교육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시스템으로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망분리를 실현하지 못함, 개인정보 보안을 위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	법제교육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성별 등)가 인터넷망에 저장되어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망분리(내부망·인터넷망) 보안기능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안 강화 추진('26년 말 사업 완료 예정)
2023	국회 (24회계연도 예산)	세계법제정보센터 서비스 개선을 위한 DB구축 사업 완료 이후 세계법제정보시스템 전반에 관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후, 수립된 ISP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필요	'26년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후 '27~'28년에 걸쳐 시스템 전면 개편 및 고도화 추진 예정

⑧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재량지출)

(담당자: 4급 박일남, 041-924-1702, 6급 이재혁, 041-924-1703)

(담당자: 5급 신연재, 044-200-6555, 6급 김성중, 044-200-6556)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법령 입안 및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체계적 법제전문교육 실시 -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입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법제실무인력의 자발적 연구·학습활동지원 및 실무자와 학계 등 전문가 사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식 교류를 통해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도모 -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23.1.,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라 국내외 유능한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국정참여 및 실무경험 등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과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 - ㉠ 법제교육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법제전문성 향상 - ㉢ 청년인턴 제도 운영
사업기간	'05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지출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5결산 ¹⁾	'26예산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25~'29계획 (증가율)	1,571	2,783 (77.1)	2,466 (△11.4)	2,212 (△10.3)	2,264 (2.4)		(9.6)
'26~'30요구 (증가율)		2,742	3,051 (11.3)	2,966 (△2.8)	2,994 (0.9)	3,018 (0.8)	(2.4)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6*	'25~'29 (당초)	2,783	○ 법제교육 : 2,515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886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7회 × 3.9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등 용역 12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 190백만원 ·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2회 × 45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4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2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 1,112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비 12개월 × 92.67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8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2.9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2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73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3백만원 - 법제교육 공사비 50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 및 법제전문성향상 : 130백만원 - 처내 교육 훈련비 56백만원 · 강사 수당 22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24백만원 · 교육훈련 등 여비 10백만원 - 법제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56백만원 · 관학공동학술대회, 법제포럼 등 45백만원 · 세미나 장소 및 차량 임차료 4백만원

			·세미나 등 참석 여비 5백만원 ·세미나 개최 등 업무추진비 2백만원 - 연구회 운영 18백만원 ○청년인턴제도 운영 : 138백만원 - 청년인턴 인건비 130백만원 - 청년인턴 활동 지원비 8백만원 · 활동 지원비 및 여비 10명 x 6월 x 0.13백만원
	'26~'30 (요구)	2,742	○법제교육 : 2,474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845백만원 ·법제교육 과정 227회 x 3.72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등 용역 12백만원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x 5백만원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회 x 1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 190백만원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2회 x 45백만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x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4백만원 ·해외연수경비 2회 x 22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 1,112백만원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비 12개월 x 92.67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8백만원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x 2.9백만원 x 12개월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x 3.2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73백만원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x 12개월 x 3백만원 - 법제교육 공사비 50백만원 ○행정효율성증진 및 법제전문성향상 : 130백만원 - 처내 교육 훈련비 56백만원 ·강사 수당 22백만원 ·민간위탁교육 24백만원 ·교육훈련 등 여비 10백만원 - 법제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56백만원 ·관학공동학술대회,법제포럼 등 45백만원 ·세미나 장소 및 차량 임차료 4백만원 ·세미나 등 참석 여비 5백만원 ·세미나 개최 등 업무추진비 2백만원 - 연구회 운영 18백만원 ○청년인턴제도 운영 : 138백만원 - 청년인턴 인건비 130백만원 - 청년인턴 활동 지원비 8백만원 · 활동 지원비 및 여비 10명 x 6월 x 0.13백만원
'27	'25~'29 (당초)	2,466	○법제교육 : 2,198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758백만원 ·법제교육 과정 223회 x 3.4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등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 190백만원 ·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2회 × 45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4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2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 970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비 12개월 × 80.8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8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2.9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2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78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3.3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 및 법제전문성향상 : 130백만원 - 처내 교육 훈련비 56백만원 · 강사 수당 22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24백만원 · 교육훈련 등 여비 10백만원 - 법제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56백만원 · 관학공동학술대회, 법제포럼 등 45백만원 · 세미나 장소 및 차량 임차료 4백만원 · 세미나 등 참석 여비 5백만원 · 세미나 개최 등 업무추진비 2백만원 - 연구회 운영 18백만원 ○ 청년인턴제도 운영 : 138백만원 - 청년인턴 인건비 130백만원 - 청년인턴 활동 지원비 8백만원 · 활동 지원비 및 여비 10명 x 6월 x 0.13백만원
	'26~'30 (요구)	3,051 ○ 법제교육 : 2,783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915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57회 × 3.56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등 용역 12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 190백만원 ·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2회 × 45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4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2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 1,135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비 12개월 × 94.58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5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3.1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2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146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4명 × 12개월 × 3백만원 - 법제교육 공사비 155백만원 - 강의실 등 자산취득비 30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 및 법제전문성향상 : 130백만원 - 처내 교육 훈련비 56백만원 · 강사 수당 22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24백만원 · 교육훈련 등 여비 10백만원 - 법제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56백만원 · 관학공동학술대회, 법제포럼 등 45백만원 · 세미나 장소 및 차량 임차료 4백만원 · 세미나 등 참석 여비 5백만원 · 세미나 개최 등 업무추진비 2백만원 - 연구회 운영 18백만원 ○ 청년인턴제도 운영 : 138백만원 - 청년인턴 인건비 130백만원 - 청년인턴 활동 지원비 8백만원 · 활동 지원비 및 여비 10명 x 6월 x 0.13백만원
'28	'25~'29 (당초)	2,212	○ 법제교육 : 1,944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696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11회 × 3.3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등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 190백만원 ·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2회 × 45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4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2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 778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비 12개월 × 64.8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8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2.9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2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78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3.3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 및 법제전문성향상 : 130백만원 - 처내 교육 훈련비 56백만원 · 강사 수당 22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24백만원 · 교육훈련 등 여비 10백만원 - 법제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56백만원 · 관학공동학술대회, 법제포럼 등 45백만원

			·세미나 장소 및 차량 임차료 4백만원 ·세미나 등 참석 여비 5백만원 ·세미나 개최 등 업무추진비 2백만원 - 연구회 운영 18백만원 ○청년인턴제도 운영 : 138백만원 - 청년인턴 인건비 130백만원 - 청년인턴 활동 지원비 8백만원 · 활동 지원비 및 여비 10명 x 6월 x 0.13백만원
	'26~'30 (요구)	2,966	○법제교육 : 2,698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926백만원 ·법제교육 과정 260회 x 3.56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등 용역 12백만원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x 5백만원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회 x 1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 190백만원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2회 x 45백만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x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4백만원 ·해외연수경비 2회 x 22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 1,158백만원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비 12개월 x 96.5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56백만원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x 3.1백만원 x 12개월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x 3.2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146백만원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4명 x 12개월 x 3백만원 - 법제교육 공사비 66백만원 ○행정효율성증진 및 법제전문성향상 : 130백만원 - 처내 교육 훈련비 56백만원 ·강사 수당 22백만원 ·민간위탁교육 24백만원 ·교육훈련 등 여비 10백만원 - 법제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56백만원 ·관학공동학술대회,법제포럼 등 45백만원 ·세미나 장소 및 차량 임차료 4백만원 ·세미나 등 참석 여비 5백만원 ·세미나 개최 등 업무추진비 2백만원 - 연구회 운영 18백만원 ○청년인턴제도 운영 : 138백만원 - 청년인턴 인건비 130백만원 - 청년인턴 활동 지원비 8백만원 · 활동 지원비 및 여비 10명 x 6월 x 0.13백만원
'29	'25~'29 (당초)	2,264	○법제교육 : 1,996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748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0회 × 3.4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등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 190백만원 ·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2회 × 45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4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2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 778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비 12개월 × 64.8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8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2.9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2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78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3.3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 및 법제전문성향상 : 130백만원 - 처내 교육 훈련비 56백만원 · 강사 수당 22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24백만원 · 교육훈련 등 여비 10백만원 - 법제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56백만원 · 관학공동학술대회, 법제포럼 등 45백만원 · 세미나 장소 및 차량 임차료 4백만원 · 세미나 등 참석 여비 5백만원 · 세미나 개최 등 업무추진비 2백만원 - 연구회 운영 18백만원 ○ 청년인턴제도 운영 : 138백만원 - 청년인턴 인건비 130백만원 - 청년인턴 활동 지원비 8백만원 · 활동 지원비 및 여비 10명 x 6월 x 0.13백만원
	'26~'30 (요구)	2,994 ○ 법제교육 : 2,726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947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66회 × 3.56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등 용역 12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 190백만원 ·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2회 × 45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4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2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 1,181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비 12개월 × 98.4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5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3.1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2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146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4명 × 12개월 × 3백만원 - 법제교육 공사비 50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 및 법제전문성향상 : 130백만원 - 처내 교육 훈련비 56백만원 · 강사 수당 22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24백만원 · 교육훈련 등 여비 10백만원 - 법제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56백만원 · 관학공동학술대회, 법제포럼 등 45백만원 · 세미나 장소 및 차량 임차료 4백만원 · 세미나 등 참석 여비 5백만원 · 세미나 개최 등 업무추진비 2백만원 - 연구회 운영 18백만원 ○ 청년인턴제도 운영 : 138백만원 - 청년인턴 인건비 130백만원 - 청년인턴 활동 지원비 8백만원 · 활동 지원비 및 여비 10명 x 6월 x 0.13백만원
'30	'26~'30 (요구)	3,018	○ 법제교육 : 2,750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947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66회 × 3.56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등 용역 12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 190백만원 ·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2회 × 45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4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2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 1,205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 관리비 12개월 × 100.4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5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3.1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2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146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4명 × 12개월 × 3백만원 - 법제교육 공사비 50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 및 법제전문성향상 : 130백만원 - 처내 교육 훈련비 56백만원 · 강사 수당 22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24백만원 · 교육훈련 등 여비 10백만원

			- 법제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56백만원 ·관학공동학술대회,법제포럼 등 45백만원 ·세미나 장소 및 차량 임차료 4백만원 ·세미나 등 참석 여비 5백만원 ·세미나 개최 등 업무추진비 2백만원 - 연구회 운영 18백만원 ○ 청년인턴제도 운영 : 138백만원 - 청년인턴 인건비 130백만원 - 청년인턴 활동 지원비 8백만원 · 활동 지원비 및 여비 10명 x 6월 x 0.13백만원
--	--	--	--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23~'2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3	1,470	-	-	1,470	1,412	-	58
'24	1,555	-	△9.5	1,545	1,294	-	251
'25	1,802	-	△10	1,792	1,571	-	221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2년	국회 (21회계연도결산)	교재개발 용역 수행기관의 다양화 필요	향후 교재개발 용역 수행기관 다양화를 위해 교재개발 용역 입찰공고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겠음. 또한, 교재개발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다양한 기관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였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TheCapitol.Net 법제교육)** 미국 연방의회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공무원, 군인, 외교요원 등을 대상으로 법제실무 워크숍, 연방 입법·개정안 작성 과정 등 법제교육 과정 운영
- **(프랑스 법제교육)** 국립행정학교(ENA)의 초급 고위공무원 법제교육 및 공무원재교육(입법학), 국립지방공무원센터(CNFPT)의 현직 공무원 대상 정책결정 및 입법기술 단기 재교육프로그램 운영
- **(독일 법제교육)** 법형식성 실무안내서 발간·교육, 고급직·상급직 공무원 대상 통합적 법학교육 모델 구축·운영

- (영국 법제교육) 런던대학교 William Dale 경 법제연구센터 법제교육 프로그램 운영(경력직 법제담당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⑨ 외국법제기관교류(재량지출)

(담당자: 5급 이원준, 044-200-6827, 6급 백선주, 044-200-6824)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 없음
사업내용	○ 기관 간 교류 - 기관장급 및 실무자급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양국 법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한국의 법제행정 발전을 도모 - 대한민국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법제발전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여 수요국의 법제발전을 지원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 아시아 각국의 민·관·학 법제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법제교류기반을 구축하고, 아시아 각국의 법제 개선사항 및 발전전략을 도출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운영 - 아시아 공동의 법제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로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 및 운영
사업기간	'05년 ~ 계속
총사업비 ¹⁾	해당없음
사업규모 ²⁾	해당없음
지원조건 ³⁾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5결산 ¹⁾	'26예산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25~'29계획 (증가율)	236	430 (82.2)	381 (△11.4)	342 (△11.4)	350 (△10.2)		10.6%
'26~'30요구 (증가율)		430 (82.2)	568 (32.1%)	568 (-)	593 (4.4%)	593 (-)	8.4%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6*	'25~'29 (당초)	430	- 외국법제기관교류(313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5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1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57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세미나 120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홈페이지 구축 6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17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17백만원
	'26~'30 (요구)	430	- 외국법제기관교류(313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5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1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등 운영 57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세미나 120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홈페이지 구축 6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17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17백만원
'27	'25~'29 (당초)	381	- 외국법제기관교류(264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5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1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등 운영 68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세미나 12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17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17백만원
	'26~'30 (요구)	568	- 외국법제기관교류(451백만원) · 국외출장여비(5회) 75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1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등 운영 105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세미나 145백만원 · 아시아 법제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10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17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17백만원
'28	'25~'29 (당초)	342	- 외국법제기관교류(225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5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1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등 운영 29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세미나 12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17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17백만원
	'26~'30 (요구)	568	- 외국법제기관교류(451백만원) · 국외출장여비(5회) 75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1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등 운영 105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세미나 145백만원 · 아시아 법제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10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17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17백만원
'29	'25~'29 (당초)	350	- 외국법제기관교류(233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5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1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등 운영 37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세미나 12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17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17백만원
	'26~'30 (요구)	593	- 외국법제기관교류(476백만원) · 국외출장여비(5회) 75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1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등 운영 105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세미나 170백만원

			· 아시아 법제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10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17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17백만원
'30	'26~'30 (요구)	593	- 외국법제기관교류(501백만원) · 국외출장여비(5회) 75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1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등 운영 105백만원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세미나 195백만원 · 아시아 법제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10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17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17백만원

* '26년의 '25~'29(당초)은 정부안을, '26~'30(요구)는 국회 확정액을 명시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23~'2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3	243	-	-	243	234	-	9
'24	293	-	-	293	280	-	13
'25	243	-	△7	237	236	-	1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없음

⑩ 법제정책연구개발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5급 박예지, 044-200-6547, 6급 송승환, 044-200-6548)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법령심사·법령해석 및 법제지원업무 등 기관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용역을 수행
사업기간	'99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제정책연구개발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5결산 ¹⁾	'26예산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25~'29계획 (증가율)	46	50	44 (△12)	40 (△10)	41 (△2.5)		△4.8%
'26~'30요구 (증가율)		50	100 (100)	100 (-)	100 (-)	100 (-)	18.9%

○ 세부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기존과 다른 신규 정책이 도입되는 등 새로운 제도 운용에 관련한 입법 분석 연구 수요 지속 증가
- 심사, 해석, 정비 등 법제처 정책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하여 수행 연구과제 개수 확대*를 통해 법제처의 정부입법 총괄·조정기능 향상 기대

* 과제 수행 개수: (26년) 1개 과제 → (27년) 2개 과제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6*	'25~'29 (당초)	50	○ 정책연구용역 1개 과제 수행 - 연구용역 과제 1개(1개 과제 평균 단가 50백만원)
	'26~'30 (요구)	50	○ 정책연구용역 1개 과제 수행 - 연구용역 과제 1개(1개 과제 평균 단가 50백만원)
'27	'25~'29 (당초)	44	○ 정책연구용역 1개 과제 수행 - 연구용역 과제 1개(1개 과제 평균 단가 44백만원)
	'26~'30 (요구)	100	○ 정책연구용역 2개 과제 수행 - 연구용역 과제 2개(1개 과제 평균 단가 50백만원)
'28	'25~'29 (당초)	40	○ 정책연구용역 1개 과제 수행 - 연구용역 과제 1개(1개 과제 평균 단가 40백만원)
	'26~'30 (요구)	100	○ 정책연구용역 2개 과제 수행 - 연구용역 과제 2개(1개 과제 평균 단가 50백만원)
'29	'25~'29 (당초)	41	○ 정책연구용역 1개 과제 수행 - 연구용역 과제 1개(1개 과제 평균 단가 41백만원)
	'26~'30 (요구)	100	○ 정책연구용역 2개 과제 수행 - 연구용역 과제 2개(1개 과제 평균 단가 50백만원)
'30	'26~'30 (요구)	100	○ 정책연구용역 2개 과제 수행 - 연구용역 과제 2개(1개 과제 평균 단가 50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23~'2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3	74	-	-	74	74	-	0
'24	68	-	-	68	64	-	4
'25	50	-	△4	46	46	-	-